

제42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6일(화)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
 - 종합정책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종합정책질의

(10시02분)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1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하세요.

○허성무 위원 2023년과 24년 세입추계 관련해서 세입추계 모형 그리고 설명 자료 및 각종 변숫값 이 자료제출을 오후 속개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2회계연도 감사원의 국가결산검사보고 제2권에 세입예산 추계 운영 실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개선 여부 이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원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예.

○김재원 위원 결산 관련해서 문체위에서 예결위에 감사요구서를 송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입니다.

KTV는 김건희 씨를 위해 황제 관람을 기획해 집행했고 이후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기하여 또 다른 공연을 추진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를 풍자한 유튜버를 상대로 별도 법률적 검토 없이 과도한 고소를 남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비용도 국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예결산 심의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꼭 살펴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앞서서 인사를 다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인사를 못 하신 고민정 위원님 그 자리에서 짧게 인사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의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석에 대기를 해 주셔서 나와서 질문을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님,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사명이 무겁습니다. 총리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좌하시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총리님, 오늘 새벽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가슴 졸이며 회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종합평가는 실제로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보고를 드리고 하게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상회담은 정상들이 기쁘게 즐겁게 웃고 끝나면 사실은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돌출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았고 사전에 제기되었던 오해가 해소되었고 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와 그리고 평화에 관련된 전략적인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되었고 거기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진전들이 다 포함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간략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 메시지를 두고 김문수, 나경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부화뇌동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분들 머릿속에는 국익은 없고 극우적 발상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외교를 지속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이번 결산은 윤석열 정부 2024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입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수십조 단위의 세수추계 오류가 발생하더니 사상 초유 규모의 세수결손과 각종 기금재원의 임의적 사용이 있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저버린 R&D 예산 5조 2000억 원 삭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카르텔이라는 윤석열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재정운용에 나타난 이 문제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을 가지고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국한된 처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 방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기본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재정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국가재정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유능해야 합니다. 유능한 답변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 내란·김건희·채 해병 이 사건 3대 특검의 활동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밝

혀내지 못했던 일들이 날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희건설 나토 순방 보석 3종 세트, 로봇개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통일교 보석 뇌물수수,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건희 일가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불법 노선변경, 한덕수와 이상민의 내란 주요임무 수행, 북한을 통한 외환 유도, 채 해병 수사 관련 윤석열의 격노,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은 해괴한 법 기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출시켰지만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시켰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새로 밝혀지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 많아 현재의 특검 기간과 인력으로는 이 내란과 국정농단을 단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총리님,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국정농단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와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으로 계실 때 예를 하셔서 언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총리로서 3대 특검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내란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특검 연장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국회에서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어제 내란특검의 법무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영장에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혐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난 내란 과정에서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는지, 검사들을 왜 보내려고 했는지,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용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습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30분에 박성재 전 장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1979년 10·26 때 전두환이 계엄사 합수부장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수진 위원** 이번 계엄에서 합수부장 내정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는 제2의 전두환 윤석열, 제3의 전두환 여인형 이 사람들에게 부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시는 법무부가 내란에 가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압수수색에서 나온 현금 5000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 따지를 검찰이 유실했습니다.

관봉권 한국은행 발행날짜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나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검찰의 증거인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지금 이 사건 보도가 나온 직후에 대검에다가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에서 감찰 시작한 직후에 바로 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 건은 올해 4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만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 사건인 이 사건, 김건희 특별법에 근거해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특검이 수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법무부가 윤석열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김현우 전 구치소장을 지난 8월 인사조치 했습니다. 인사조치 사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변호인이나 관계자들 접견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서울구치소의 인적 쇄신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저는 인적 쇄신이 아니라 감찰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월 강의구 전 1부속실장의 윤석열 접견 시에 휴대전화 반입이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수진 위원** 구치소장이 허가한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지요. 휴대전화 반입은 그 자체로 내란 수괴의 증거인멸의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형집행법 132조에 따라서 수감자가 허가 없이 통신기기를 지닐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지금 구치소…… 교정본부 산하에 특사경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명백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계획입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거부 CCTV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이 된다면 CCTV 공개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열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내란 수괴, 피고

인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들을,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복기해 보자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도 과분합니다.

윤석열 수감자 관리 제대로 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안규백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이수진 위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오늘 26일부터 시행이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해당되신 분들의 분담금이 약 5000에서 9000만 원 정도 덜 내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빠른 공약 추진에 대해서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설 때 서울공항 관련 활주로 각도가 2.71도 변경됐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고시를 통해 해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비행안전구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했어야 할 일부 지역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경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2롯데월드가 신축이, 동편 활주로가 시작된 게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당시에 했던 겁니다. KA-1전투기까지, 성남공항에서 원주공항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하면서 이 동편 활주로를 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성남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변경 지역 도형의 문제는, 일단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15비 성남비행장에서 아마 심의를 할 예정이고 또 이게 올라오면 합참에서 심의를 하고 합참 심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심의를 완료해서 9월 중으로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장관님,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조속히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를 해 주셔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외에도 성남시의 용역연구 결과 성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활주로 동측을 통한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서측으로 바꾸면 원도심과 주택가가 많은 활주로 동측의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선회접근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지형적 요인을 고려해 비행기를 특정 경로로만 접근하도록 하면 비행안전 5구역의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는 김해공항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필요한 최소 강하 고도(MDA)를 현실화하는 겁니다. 현재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소 강하 고도 310.9m를 적정 고도인 286.5m로 조정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합니다.

장관님, 이 세 가지 방안 국방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군공항은 일반 민항 공항과 달리 ICAO(국제항공기구)에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FAA(미국 항공청)에서 준용을 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공항 준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어떤 특정 지역으로 활주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좌우로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남 주민들의 약 58%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쓰긴 쓸 예정입니다마는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관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현재 김태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저도 공동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군사시설 안전보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법안 개정,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군의 작전성 검토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 왔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성남 고도제한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총리님,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항공 참사 등 재난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총리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데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규정을 어기고 다단계·쪼개기 하청 등으로 위험을 외주화했고요 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위험을 계속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바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산업재해가 발생해 치러야 될 비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서라도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수진 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계속된 무력화 시도가 있었고요, 이게 제대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고요.

중대재해 발생이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폭이지만 줄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총리님, 중대재해처벌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이었던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2022년에 402명, 2023년에 356명, 2024년에는 328명으로 줄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건설업의 산재 사망자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철도업의 산재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철도업의 산재 사망이 계속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근본적으로 안전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하는 것이 그 이후에 드는 비용보다 더 낫다라는 큰 제도적인 방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 사망 형태를 보면 60% 이상이 하도급 노동자입니다. 철도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대해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위장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레일 등 공기업들도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고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 받고 싶고 또 임원진 성과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안전과 그리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부처에서 한편으로는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를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이러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수진 위원 노조법 2·3조도 어찌 보면 이 산재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 이런 불공정한 구조들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합법적으로 하도급 형태가 이루어지고 탈법적인 하도급은 반드시 구분해서 바로잡아 나가 주시고요. 그래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들고 잘못된 하청 구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저녁에 총리님께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발표한 내용이 속보로 뜨면서 질문했을 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회담을 통해서 미스언더스탠딩……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였으니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미동맹의 현대화이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에서……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어떤 배경에서,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미국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거기에는 한국의 국방비의 증액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등등을 포함한, 사실은 거기에는 우리 군의 전작권 회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 큰 필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확장된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AI·사이버·우주 쪽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라는 차원의 필러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미중 어떤 경쟁에 따른 인태에서의 중국 견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든가 전략적 유연성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과거에 우리 한국이 무임승차를 한대라는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죽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 국방비를 5% 증액하는 그다음에 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 100억 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런저런 측면들이 감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임종득 위원 사실 여기에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가지고 있던 스탠스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익 차원의 실용외교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임종득 위원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요전에 있었고 그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 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 대표 때부터 누누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어떤 특정한 이념이라든가 어떤 국가와의 친소 관계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상정해 놓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집에 보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외교를 실현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가서 가지고 대통령께서 요미우리신문과 8월 21일 날 인터뷰를 하셨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임종득 위원 그의 내용들을 보면 ‘위안부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가능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립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하면 좋겠다.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굉장히 고뇌 어린 판단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생각이라든가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현재의 한미일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고심 끝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그 답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총리님이 방금 하신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이후에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693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봤습니다.

○임종득 위원 정의기억연대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믿었던 국민주권정부가 또다시 이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

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역사가 객관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의 정부들의 정치적 합의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저분들의 인식에 동의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것이 지금 대통령님의 입장 변경과 시민단체의 입장이 배치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풀어내는 데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한편으로는 꼭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일정하게는 독립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할 때 순간순간마다 강력하게 비판을 해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한번 PPT를 보시면, 23년 3월 7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결정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 한일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 한일회담에서, 그다음에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밝힌 것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한일회담과 그 전후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밝히신 입장은 역사적인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미래와 관련된 이슈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풀어 나가자 이런 것을 선후를……

○임종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정도의 입장 변화가 생긴다면 먼저 선행돼서, 아니면 갔다 오서 가지고라도 기존에 친일몰이를 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친일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과 또 현시점에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래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은 또 별개의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친일 그 부분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뉘앙스 전반을 아까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분위기의 뉘앙스를 가지고 실용외교를 하겠다고 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을 했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친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뒤집거나 또는 그 부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변화한 상황에서 국익을 놓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외교를 펼쳐 나가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야당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결국 통과가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임종득 위원 이제 남은 마지막 희망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인데 이 재의요구를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야당의 우려 잘 경청했습니다. 시행 기간 동안에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노란봉투법은 다른 법하고 좀 달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21대, 22대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더 개악으로 가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난번 거부권 행사된 법안보다 제 나름대로는 재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그 정도예요? 장관이 그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슬라이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법을 고치면 된다’, 문화일보에서는 부총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저런……

○임종득 위원 한번 신문 확인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총리님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현재는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저는 이것을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떠날 결심을 한 기업이 법을 고친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고 부총리님은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기업들의 우려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한다면 아마 기업들도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확실하게……

○임종득 위원 아니, 해 보고 나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면 그때 법을 고치겠다, 지금 거대 여당이니까 법 고치는 게 그냥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책임한 겁니다. 만약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실화된다면 예상되는 경제손실 규모가 얼마입니까? 빼 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것을 미리 계산해 내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의하고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보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들이나 또 해외투자자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대응을…… 예상되는 손실 규모가 얼마고 이게 만약에, 그래도 법은 통과되고 재의요구를 안 하면 그냥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기업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됐다 그러면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 고치는 거예요, 대응방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미리미리 판단할 건 판단하고 해서 건의도 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에 대응해서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대책들도 정부가 미리 세워야 합니다.

정부, 민주당은 아무 근거 없이 이 법이 통과되어도 기업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라는 희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알면서도 국민을 현혹하는 것인지 무능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기업들 우려도 저희들 알고 있지만요 이게 또 저희들이 현장에 잘 안착시킨다면 노사관계가 더 투명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종득 위원** 이게 그러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유리한 법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노동관계의 선진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은 또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려가 넘쳐 나잖아요. 왜 이 우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소장 필립 반 후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

이 유럽상의 해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해운사가? 한 350개 됩니다. 고용인원이 한 11만 명 돼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의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이지요—‘노란봉투법 깊이 우려한다. 한

국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참은 800여 개의 미국 기업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밝히기 좀 어려워서 익명으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해외 기업이야 마음에 안 들면 한국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재고해 달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6단체가 여당의 노란봉투법 대혼란이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어요.

이 원인이 지금 뭐에 있다고 부총리님은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 구체적인 관계하고 관련해서 그런 경우만 한정적으로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장관입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노란봉투법을 다 반대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왜 이토록 반대하는지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참, 암참 제가 다 방문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선 아무래도 노조법 개정해 대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오해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n청까지 교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현실로 비춰 볼 때……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대 쟁점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노동법이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재계에서 낸 반응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다, 만약 이게 현실화됐을 때 손해를 보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대기업이 손해를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도 충격을 많이 받겠지만 사실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노동자들, 취준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 창출을 위해서 민노총과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미래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발언 내용 보셨지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의 SNS 입틀막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지요.

문재인 정부 때도 유튜브·블로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한다 해 가지고 기성언론 규제로…… 그것 발표하자마자 반발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전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무더기 고소 고발, 민주파출소 홍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공약집에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극우, 선동, 혐오, 차별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극좌는 그러면 친헌법적이고 친사회적인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혀 근거 없이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나누는 그런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갖고 얻는 이득보다는……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극좌든 극우든 극단적인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만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엄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음 PPT를 한번 보시지요.

사실 지금까지 음모론 배포,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본 것은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광우병 음모론, 후쿠시마, 사드 전자파 문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짜뉴스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최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계속된 부정선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것은……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좌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극우를 이야기하면서 SNS와 관련된 유튜브들의 엄단 부분들이 형평성을 잃어버렸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음.

가짜뉴스 음모론의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별히 이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김어준 씨 같아요. 음모론,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쿠시마 오염수 음모론, 사드 음모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라든가 유튜버에 대한 엄단을 얘기하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장관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 균형감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오해 받지 않게, 어쨌든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제될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의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구의 고민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늘상 이곳 국회 안에서는 국민들을 살리겠다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에서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절박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도대체 이 자살률이 왜 줄어들지 않는가,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질의를 오늘 하기도 할 텐데 글썄요, 저는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그런 증오와 혐오 또 자살률을 줄여 보겠다는 절박감에서 가장 둔감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사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인권위원 명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위원회라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게 어떤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자고 하는 마지노선이 바로 인권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위원으로 추천하신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현 교수, 반동성에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전에 지영준 변호사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셨는데 동일한 이유도 비판받았고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또 우인식 변호사, 전광훈 목사 변호인이었습니다. 전광훈 당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시는데 결국 국민들 눈에는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하는 자괴감을 갖고 계신 겁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 나와 계십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제발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것, 실제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 증오와 혐오를 벗어나고 그 자살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쨌든 여야 혹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상황에 과연 대한민국의 입법기구인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잘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또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더 힘 있게 그리고 더 각오를 가지고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제가 일부러 첨언을 했습니다.

고용부장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살 문제, 증오·혐오 문제, 모든 부처의 모든 곳에 다 깔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발적 실업자들은 결국은 명예퇴직이나 혹은 정리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실업자들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고민정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자리이니만큼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추진이 돼 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취약계층취업촉진 예산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22·23년의 그 예산만큼의 절반가량으로 24년에는 뚝 떨어졌었다고요. 물론 25년에는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다행스럽지요. 하지만 이게 과연 이 비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그 마음이, 국가가 그 마지노선을 좀 지켜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상 이런 예산을 보면 무슨 수천억, 조 단위도 아닙니다. 작은 예산인데도, 작은 예산이어서 늘 예산국회 때면 다 날아갑니다. 장관들은 상임위에서 지켜 내겠다고 위원들한테 약속하지만 기재부의 칼날 앞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늘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약자들이고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늘 가장 먼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25년도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으니 그냥 이 정도로 맞추겠다…… 저는 고용부장관님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가장 아래 단위에 있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게 25년 예산하고 동일한 숫자로 올라오면 제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겁니다. 단 얼마가 됐든 그 성의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시는지……

예.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목표자살률이라는 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치에 달성이 됐는지도 당연히 보겠지요. 제가 2004년도 것부터 쭉 봤는데요. 그 목표치에 결과물이 다다랐던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계속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맞습니다.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계획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잡든지 아니면 그 계획의 결과가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숫자가 한참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결과가 완전히 따로 놓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적절하게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정책이나 전략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이번에 자살유발정보 감시센터 그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모니터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 이건 그냥 모니터링 차원입니까?

대통령께서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든 낮춰 보라 하는 특단의 대책을, 그러니까 지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주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5차 계획을 보완하는, 강화 계획을 현재 검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되면 윤곽이 나오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9월 초 정도까지는 초안을 마련해서 자살예방의 날 때 일부 방향을 발표하는 걸 목표로 부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일본의 경우는 2011년에 21.4명이었는데 21년에는 15.6명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자살예방 예산이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자체의 전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많이 늘린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예산 확보할 자신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내년도 예산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종합 계획과 범부처 계획을 통해서 좀 더 중장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고민정 위원 총리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얼마큼 부처 안에서 작동이 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의 그 한말씀으로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정권 초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늘 예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산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이 자살에 대해서도 엄중히 보시는 건 최소한 산 사람은 좀 살리자 하는 절박함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자살·산재 이 문제들을 다 제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불의의 죽음을 줄이자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노동부 등등 각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하되 실제로 논의를 해 보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걸리는 일이고, 복지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제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아까 위원님 표현처럼 성의가 드러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게요, 여의도 안에 있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항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절박한 호소들이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PPT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인데요. 어떤 한 학원의 광고 현수막입니다. 교육부차관님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적 향상자들의 이름과 그리고 몇 등급이 올랐는지가 적혀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미 수많은 학원들에서는 저런 현수막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러겠거니, 그냥 모두가 다 하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학생이 투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 걸려 있던 그 광고 현수막입니다. 우리 제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현수막부터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특정 학교의 합격 사실을 이용한 광고는 아예 그냥 금지해 버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글썽요, 이것도 표현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는 저희가, 특히나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내가 살리지 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좀 과도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 저렇게 학생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이용한 광고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보면 자살률이 OECD 가운데 계속해서 1위입니다. 오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치의 수치를 쭉 들여다보니까요, 노년층의 자살률은 그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일자리 문제도 해결도 하고 돌봄 영역도 해결도 하고 이런 게 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대의 자살률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숫자만 보시더라도요, 2020년에 148명에서 24년에 221명까지 계속해서 늘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자살률입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이 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차관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 학생들이 경쟁체제에서 느끼는 고립감이 너무 크고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학업 부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모든 정치권에서는 기초학력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문제의 정답을 풀 수 있게, 더 좋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 안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게, 거기에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AIDT를 그렇게 막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만점 학생들만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은 차관님께서 학업 스트레스를 말씀은 하셨지만 그건 그냥 감이예요. 왜냐? 교육부가 그 학생들이 왜 자살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심리부검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고요, 왜 이 사람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나. 자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이라는 걸 실시해서 그것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 구멍이 있는 겁니다. 19세 이상 성인 자살자들에 한해서만 복지부가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현재 성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10대들의 심리부검 필요하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의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연구용역하는 아주 작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잘렸습니다.

차관님, 이번 예산에 그것 담아서 올리실 거지요?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최은옥 예, 크지 않은 예산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금 아까 지적하신 복지부의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하려 해도 자살 학생에 대해서 경찰이 보유한 그런 정보들, 관련 정보를 저희가 얻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복지부장관님이 얻을 수 있게 지금 법률상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와 협업이 굉장한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필요하면 법률 근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지금 복지부장관님도 계시고 누구보다 총리님께서서는 예전에 약자의 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챙기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구조활동에 출동했었던 고 박홍준 대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장관님께서 또 조문도 다녀오셨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슬펐던 건 그 대원 이전에 40대 베테랑 소방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불승인됐습니다. 만약에 그걸 승인받았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과성을 입증해 내는 게 어려워서 그랬다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늘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행정 하겠다고 하지요.

저도 박흥준 대원의 빈소에 다녀와서 그 자리에서 소방대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방공무원들을 대폭 늘렸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거의 1년에 수천 명씩을 늘렸더라고요. 3000명, 4000명 단위로 계속 증원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래서 아주 많이……

○**고민정 위원** 그런데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5명 늘었고요. 아까 보니까 79명 늘었고요. 이런 정도의 수준 차이가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누군가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누군가 대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도 너무 빠듯하니 누군가가 빠져 버리면 미안해서 빠지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보완,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근본적으로는 소방관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또 여객기 참사 이런 각 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안부에서도 특별지원단을 만들고 여객기 참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단 업무를 하면서 한편에서 그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소방관들 또 경찰관들도 있고요.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슴에 정신적으로 남은 상처, 충격이 대단히 큼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장관님, 현재로서 저는……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참사가 나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엄청난 재난의 상태에서 매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 가는 걸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차라리 안식년 제도라는 게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소방청에서 저에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장기 쉴 수 있는 이것도 못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5일 쉬고 10일 쉬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쉽니다. 왜?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냥 ‘늘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얼마큼 늘리겠다라는, 우리 이재명 정부 안에서 얼마큼 복원해 내겠다라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혹은 소방공무원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소방청과 상의하고 그리고 또 관계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증원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의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상당수 많이 빠졌는데 참석, 정부기관 대표님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밤 12시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결위 결산심사 날인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부터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래간만입니다. 매주 매일 아침 새벽에 목욕탕에서 뻗었는데 또 여기서 만나니까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어제 잠 제대로 못 주무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12시에 마치고 나가고 가시자마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챙겨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국민들이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저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갑자기 회담 1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생각지도 못한 트윗을 해서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총리님, 다른 분들도 질문하셨지만 그 트윗을 날린 배경이 어떤 거였던가요? 대충 감도 안 잡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감이 안 잡힙니다.

○김종양 위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본인이 ‘미스언더스탠딩(misunderstanding)’이라고 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김종양 위원 소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쉽게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던지는 메시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양한 기회에 다양한 상대를 접할 때 굉장히 의외성 있는 발언이나 또는 글 같은 걸 남긴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는 한 여기서 해석을 굳이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실리를 득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성……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국에서는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던지시 던져 주는 것은 아닐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오히려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의 설명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교정되는 것을 보면 저렇게 쉽게 교정될 수 있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혹시 잘못 전달되었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는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은 선부른 것 같고요. 국익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떠한게 평가할지는 이제 돌아오신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된 데에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응변식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렇지요?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상당히 아주 친절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데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부터 분위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무총리 김민석 뭐 꼭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김종양 위원 사실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남들한테 막 친절하시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주 이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하시는 그런 분인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시지요.

꼭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국익을 놓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이고, 개인적인 성품에 있어서는 비교적 그런 친화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는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치적 스탠스, 특히 대외정책과 관련된 기조에 있어서도 좀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대통령께서 ‘세세(謝謝)’, 대통령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세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실용외교를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으로 여겼었는데 이번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가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담에서 보니까 안미경중, ‘과거에는 안미경중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대한 성향을 예전과는 달리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지금 그 정확한 발언 요지를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나라들과 관계를 친하거나 또는 소원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도 동시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나는 혹시 또 이번 정상회담 등을 보면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이 변신을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시시때때로 말이 바뀌는 그런 사람…… 사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정치적 과정을 겪으면서 많잖아요. 말을 너무 자주 바꾼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식의 평가도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도 정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주 김민석 총리를 만났었는데 제가 한번 짚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직 해외는 많이 못 나가 보셨지요? 총리 되시고 나서 해외는 아직 못 나가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되고 나서요?

○김종양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김종양 위원 저는 어찌다가 보니까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의 총재를 했었습니다. 한 3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국제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의 나라,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그런 국가고 그야말로 극빈국,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그런 국가로 바뀌었으니까 정말 당신네 나라는 신비의 나라고 정말 불가사의한 국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계속 저한테 부럽기도 하고 정말 자기들 나라도 벤치마킹하고 싶다, 좀 가르쳐줘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총리께서 나가시면 그렇게 되실 거고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국가의 총리가 되셨으니까 얼마나 자부심도 갖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땀과 눈물, 열정, 헌신이였겠지만 사실 다른 많은 외국 국가들의 도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총리께서는 어느 국가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미국과의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외국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거의,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직에 한때였거나 지금도 여전히 반미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옛날 식으로 생각해서 친미·반미 이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거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 결과를 보면서 그런 우려를 다소 불식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간에 미국이 했던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미 특정 국가의 친·반 이런 프레임은 넘을 때가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위상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님한테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과 관련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강하게 공공기관의 임기를 법대로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당이 되자마자 ‘뭘 소리야?’ 하면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각종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야말

로 내로남불의 전형, 이중적 잣대 이런 모습을 갖다가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 앞두고 기관장 59명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사실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인데도 당시 민주당은 ‘뭘 소리야? 윤석열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관장을 내쫓는 것은 국정 안정성과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민주당에서 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러저러한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지요. 당시 총리께서도 국회의원이셨으니까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뜻과 행동을 같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돌변했습니다. 임기 보장된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 소위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 행태를 볼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를 내란정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 정권에서 임명된 모든 기관장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에 따라 보장된 임기 규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란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는 등의 민주당 식 접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란과 관련한 수사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의 견해가 존재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니 결국은 앞으로를 생각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어떤 정부와 공공기관의 임기는 맞추는 것이 실제로 일을 하는 데도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공론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최근에는 더 설득력을 띠는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런데 불과 이삼 년, 그야말로 며칠 전의 생각, 행동하고 며칠 후의 생각, 행동이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렇게 총리님 생각처럼 선하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야, 내란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너희 다 나가’ 이런 이야기에다가 그리고 또 공공기관장들의 언행을 빙미 삼아 가지고 그야말로 꼬투리 잡기 식으로 또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모욕을 주거나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출, 사표를 내라는, 사표를 종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매국적 협정을 했다는 등의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 같고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뇌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인 자전거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

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뇌물 수수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표를 종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또 김형식 독립기념관 관장의 어떤 그런 발언 내용, 전후 맥락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말만 부각시켜 가지고 지금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이학재 인천국제공사 사장 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기 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서 그것을 문제를 덮을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김종양 위원** 하여튼 여야의 어떤 그런 위치를 떠나 가지고 형평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운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해 놔어요. 민주당, 다수당 여당일 때 이것 통과시켜 가지고 자기 입맛에, 모든 사람 공공기관장 퇴출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임명하고 또 야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입법 독재의 형식으로 ‘그때 법 바꾸면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법 개정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제대로,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아닌 것 같으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가장 정의의 투사로 여겨지는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시절 3년 동안 임기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해 가지고 임기를 다 채웠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민주당, 특히 여당에서는 정의의 상징처럼 그렇게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서 가지고, 특히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시기와 상관없이 지키라는 말씀은 아주 감사하게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겠고요.

다만 전현희 위원장 케이스는 그렇게 보장된 케이스라기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싸워 낸 케이스로 조금 별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지역 현안이자 국가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안 오시고 차관님 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양 위원** 차관님, 지금 대한민국 주요 지역 거점도시들 중에서 교통의 가장 오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말씀하시는 남해권 지역이 교통이 좀 오지 지역이 많습니다.

○**김종양 위원** 지금 전국이 KTX로 2시간대에, 아무리 멀어도 2시간대에 갈 수 있는데

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KTX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동대구까지는 고속철도선을 이용하잖아요, 경전선이. 동대구부터 창원, 진주까지는 일반 철도선로를 이용해서 거의 완행열차 수준으로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시간 넘게 소요가 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창원이 기계산업 등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는 데 큰 기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수출 주력산업인 원전, 방산, 철도, 조선의 메카가 지금 창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로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창원에 대한 더 많은 인프라 제공으로 창원 경기가 제대로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부차관님, 철도 5차 건설투자계획 지금 진행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5차 철도망 계획 수립……

○김종양 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고속전철화하는 것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지금 ‘창원까지 가는 데 3시간 걸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 왜 고속철도선이 없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그리고 교통부차관님, 철도 이용객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노선이 과밀한지 아닌지 그건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이용률과 승차율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김종양 위원 지금 전국 노선 중에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경전선입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지금 KTX도 마찬가지로 SRT도 마찬가지고요. 전국 노선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경전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차 운행 횟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지고 열차 편수를 좀 증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에 운행되고 있는 고속열차의 마지막 열차도 보면 9시대에 끝이 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NC 야구단이 있어요. 야구 야간 경기하면 대충 몇시에 끝납니까? 9시 넘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철도 막차 시간이 9시 43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경기 중에 뛰쳐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또 관중을 늘릴 수 없어 가지고 NC 야구단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엄포 아닌 엄포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깐 사실 편수 증차뿐만 아니라 시간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김종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김재원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위원** 총리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K-한류의 힘 정말 대단하지요.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거듭 강조해 온 문화예산 확대,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문화수출 역량 강화 이러한 목표들이 드디어 국정과제로 안착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참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컬처 300조 시대가 그냥 말뿐인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이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AI·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양자기술 같은 그런 신기술을 어떻게 개발해 내고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콘텐츠 산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결합시켜서, 이것이 가장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또 역시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기관 협력도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문화기술 개발, 콘텐츠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점유 공고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총리님,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역대 최대 R&D 예산 35조 3000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퇴행적이다 못해 비상식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를 복원 수준을 넘어서서 더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총리님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리를 좀 해서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팔 정도 노래를 하려면 일단 녹음하고 등등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김재원 위원** 예.

또, 시설뿐입니까? 제 생각에는 재료도 필요하고 요리사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가스, 연료도 필요하고 조리기구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다음에 노래 전달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겠지요.

○**김재원 위원**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빼고 총리님한테 제가 ‘멋진 요리를 만들어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총리님 하실 수 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누가 어느 정도 틀을 딱 잡고 노래만 잘하면, 가서 부탁하면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요리하는 데 장소, 재료, 조리기구, 연료, 요리사 등등이 다 한꺼번에 필요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역대 최대 R&D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문화기술 영역 R&D 예산 규모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또 총량적으로도 적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이 1052억 원에서 이재명 정부 K-컬처 300조 원 시대 공약에 힘입어서 26년도 예산은 1526억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체 R&D 예산에 비해서는 그러나 약 0.35%에 불과한 그런 수치입니다.

총리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리고 갖춰야 할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요리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낼 수가 없는데요. 문화기술 영역 R&D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대 최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K-컬처 300조 시대가 그냥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확충 또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주로 R&D라고 하면 과학 R&D에 국한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 관련한, 한류 관련한 R&D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장관님께도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요리 얘기입니다. ‘장소, 재료, 조리기구, 연료, 요리사 중에 요리사 빼고 그다음에 조리기구를 빼고 요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힘드시겠지요?

지난 6월 30일 날 예결위 추경심사에서 본 위원이 당시 기재부차관님께 직접 문화기술 R&D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부설기관 확대·개편에 따른 티오 확대 그리고 문화기술 R&D를 통한 K-콘텐츠 수출 50조 달성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기재부도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사이 내년도 주요 R&D 운영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도 삭감되고 인력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적정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야,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의 취지를 저는, 요리를 잘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요 지난 3년간 기획·평가비가 실질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돈을 많이 줘도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두 번째 중 하나는 과거에는 작은 작은 과제를 굉장히 숫자를 많이 늘리다가 내년부터는 ISD라고 그래 가지고 숫자를 굉장히 줄입니다. 그러니까 큰 큰 과제로 하다 보니까, 작은 과제를 여러 개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과제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좀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인력도 증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원조차도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현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정원을 줘도 현원도 못 채우면서 또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집행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걸 좀 하고 나서 보완해 오면 우리가 그때 적극적인, 요리를 위해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현장에서는 사실 증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직원을 늘려 주는 방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 뽑아서 쓰는 그런 직원으로 하기에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이 단순히 돈의, 숫자의 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R&D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52억 원에서 1526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나 운영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가 한 달, 두 달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6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기술센터 기획평가관리비 정부안을 보면요 25년 기평비가 50.56억 원에서 26년도에 39.41억 원으로 22.1%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기획평가비는 문체부 R&D 중장기 전략, 대형 사업 기획, 사업 개선 기획 등 재원이고 관리비는 사업 진도 관리, 성과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사업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재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업비는 45% 확대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기획평가관리비가 22.1% 삭감된다면 늘어난 업무량은 고스란히 현재 인원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업무 과중으로 사업 성과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문체부가 사업 담당 인원에 대해서 15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1명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새정부 K-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 기재부가 손을 만일에 놓으신다면 제가 보기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의 꿈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찌할까요?

큰 기대를 걸고 계신 대통령께서도 ‘아니, 돈을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미흡한 거야’라고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잘 상의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역시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케데현’ 보셨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재원** 위원 북미 극장에서 열린 폐창 이벤트 1000여 회가 올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금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한류 인기 현상을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과 연간 124억 달러 흑자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등 최근 국가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무역 구조 변화가 되었지요. 이 여파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 강국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이상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만 국가 경제를 기획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이 경제의 돌파구로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현재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전례 없이 확대해서 약 20개소가 늘었습니다. 총 30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문화상품을 전시하는 해외 홍보관 그리고 입주시설까지 갖춘 해외 기업지원센터까지 더하면 총 33개소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셈입니다.

장관님, 수출 장려를 위한 콘텐츠 해외사무소의 역할 필요성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동의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기관 현실을 파악해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최근 해외사무소가 3배 규모로 확대돼서 20여 개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규 설립 및 운영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외거점의 운영을 위해 배정된 인력은 단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개소가 20개가 늘어났는데 배정된 인원이 10명이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콘진원은 해외거점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해서 내부 인적 자원을 해외거점에 우선 배치하는 등 자구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인력에 따라서 근로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단순 계산해도 직원 일인당 집행해야 할 예산이 54% 증가되었고 최근 5년간 행정직 퇴사자가 62명, 정원 333명의 19%에 달하는 등 해외거점은 물론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PPT 주시지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외거점별 인력 평균 정원이 무역은 3.4명, 관광은 2.6명, 식품 2.5명, 콘진원은 0.4명입니다. 기관 해외 인력 정원이 매우매우 부족합니다.

K-컬처 300조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목표 그리고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문화산업에서 찾고자 하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서 비춰 볼 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는 이것을 그냥 숫자로 혹은 금액으로 맞추는 거 이외에 정책 목표를 어떻게 수행해서 목적 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신지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K-콘텐츠 골든타임입니다.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타 산업 분야에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지요. 그래서 산업의 부스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합니다. 우리 콘텐츠를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훌륭한 요리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기술 R&D 기관과 더불어 해외비즈니스센터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을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재정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이지요.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 집행과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서는 법정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거는 법정 서류입니다.

○김재원 위원 예산안의 각 목은 세부 집행 목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허위로 기재하면 국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 예산안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원 위원 국고로 운영하는 국립학교에서 매해 반복적으로 허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PPT 보시면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예산안인데요.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허위 편성이 반복된 정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액 하나, 0 하나, 1 하나가 틀리지를 았고 똑같았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결산심사와 예산심사가 반복되었던 수년 동안 기재부 심의를 피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감사를 조만간에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사례처럼 허위 예산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봅니다.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 국가재정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예산이 승인된 편성 목적에 맞춰서 사용돼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번 결산 심사 의결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관리 감독, 문체부가 하고 계시지요?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여러 사안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회계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허위 예산 편성과 집행 외에도 특징인 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이해관계 충돌 의혹도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전통예고와 수의계약을 맺은 장인국악기 대표가 있습니다. 장인국악기 대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전통예고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요, 학부모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인 왕기철 교장과 2015년에 공연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학교 그리고 학교장과 모두 특수관계자가 대표로 있는 장인국악기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2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특정 업체의 특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예산 유용이나 부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 이런 비정상적인 이해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또한 수업이나 공연용 악기를 살 때 같은 악기를 여러 업체로 나눠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의계약 쪼개기로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이자 배임행위입니다.

장관님, 해당 사안들 하루빨리 문체부의 철저한 감사 진행해 주시고 사실 확인이 되면 해당 학교장을 비롯한 책임자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위원님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감사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철저하게 감사해서 감사 결과와 대책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반드시 이 부분 관련해서 책임자를 처벌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앞으로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 성산의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 허성무 위원입니다.

1945년 독립 이후에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 참 암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암살 사건이 있었고요. 지금도 배후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범인만 나왔을 뿐이고요. 여운형 선생님은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또 암살을 당했습니다. 송진우 선생님의 암살도 있었고요. 그 이외에 또 조봉암 전 농림부장관은 사법살인을 당했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런 정치적 테러, 암살 정말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지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납치되어서 현해탄에서 암살당할 뻔하다가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범인과 배후가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여러 해 전에 목포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트럭의 테러에 다리를 다쳤고 평생을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그러나 그 사건의 배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지요. 염산 테러를 당했지요. 역시 배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야당의, 1당의 대표였던 현역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를 테러·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mm만 더 깊게 들어갔더라면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로 숨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구사일생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요. 저도 그날 현장에는 없었지만 저 소식을 듣고 부산대학 응급실로 달려가서 떠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보들과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이런 정도면 반드시 테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당시에 거기에 적합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인 이재명 당시 대표를 오히려 조롱하고 능멸하고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여론을 오도하고 심지어는 ‘목에 굵힌 정도다’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도 철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물로 씻어서 은폐했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커터 칼을 사용했다는 왜곡된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덮어 뉘야 되는 겁니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런 비문명적이고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정치테러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허성무 위원**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PPT 다음 것 좀 보여 주십시오.

세수결손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는데요. 23년, 24년 엄청난 이런 결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결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추경 세입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다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용 그다음에 교부세·교육교부금 불용 이런 걸로 버텼어요.

이 중에서도 기금을 공자기금에 빌려준 것 중에 산재기금이 3조 3000억 정도 그리고 방폐기금이 3조 8000억, 약 3조 9000억 정도가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13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것은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그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보상에 주기 위한 그런 기금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물론 부담은 사업자 측에서 지는 거지만.

그런데 기재부가 이것을 공자기금으로 가져간 거지요. 고용노동부가 이것 반대하고 방어했어야 되는데 그냥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건데, 문제는 이 공자기금 운용 수익률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2.5~3% 정도 되는데 이 산재기금을 정상 운용했을 때는 약 8.15~8.18%지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그대로 들고 운용을 했더라면 사실은 1900억 정도 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기재부가 공자기금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이 기금에서는 약 1900억 정도의 사실상의 수익을 못 가져오게 된 거지요. 손실을 본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산재를 당한 우리 노동자들에게 챙겨 줘야 될 게 그만큼 위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5년에도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3조 3000억이 아니고 4조 8000억으로 올해는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겠지요.

물론 기재부 힘이 워낙 세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재정법 제13조 위반입니다. 정부기관이 스스로 법을 이렇게 위반해서 해셔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부처 장관님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작년보다 올해 1조 5500억 더 공자기금을 빌려준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장관님 안 오고 차관님 오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어디 계신가요?

산자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엿것으로 좀 바꿔 주세요.

산자부에도, 역시 많은 기금을 빌려줬지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허성무 위원 그 액수가 3조 8800억이 넘습니다. 약 4조 가까이 되지요. 이걸 빌려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방금 고용노동부하고 똑같지요. 그렇지요? 역시 공자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낮고 이 기금의 운용 수익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액이 2170억, 약 2200억 정도 차액이 나요.

방사성폐기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되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기재부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법으로 제외한다 해서 금하고 있는 기금들을 공자기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 국가재정법 13조 위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기금을 많이 당겼던 것은 잘못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자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하도록 공자기금법에 활용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허성무 위원 예,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이게……

○허성무 위원 회계와 기금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예외를 둔 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말하는 것은 위원님은 사업 간 전출입을 말하는 거고요. 여유재원을 가져와서 공자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은 공자기금법은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지금 저기 보면요 예외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한 거라서 그리고 미래에 취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최재해 원장님, 해마다 결산을 할 때 감사원에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24년도에 대해서도 어제 요약해서 원장님이 발표, 보고를 하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그런데 22년도에는 0.7조, 약 7000억 정도의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19페이지에 걸쳐서 이 감사보고서에 수많은 지적들을 기재부에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는 56조 4000억의 결손이 났는데도 검토조차 안 해요. 그래서 당연히 시정요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장님께서 여기서 보고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조 8000억이 결손이 났는데 세 페이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시정요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공정한 감사보고서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좀 설명드리면 22년도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분을 보고서에 담은 거고요. 어제 보고드렸던 24회계연도 건은 23년도 예결위 지적에 의해서 세수결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원인을 분석해서 달라고 해서 사실은 결산 확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수결손의 원인을 분석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22년도 감사를 한 이후에 기재부에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했고 기재부에서 23년, 24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원장님,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표면으로 드러난 이 보고만 들으면 23년도, 24년도는 상당히 훌륭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22년도는 정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편향된 내용이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장 최재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허성무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허성무 위원 그래서 첫째로 감사 범위와 기준을 누가 어떤 절차로 축소·변경했는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22년·23년·24년 적용 기준, 범위, 심사 강도 이 차이를 입증하는 내부 결재 라인과 검토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둘째, 국회는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해 감사원이 검토보고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며 이를 시정사항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결산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사안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84조 2항은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국회 시정요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조치 경과 등을 명확히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허성무 위원 그다음, 셋째로 역대급 세수결손의 핵심을 비켜 간 이번 처리로 의도적인 부실·봐주기·방탄 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데이터 감사와 정책 감사를 즉시 병행 착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필요한 자료를 갖고 가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올 하반기에 세수결손에 관련된 감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감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원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 여부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요청한 자료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고 감사 잘 준비해서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R&D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3년 말 윤석열 정부의 R&D 대폭 삭감에 맞서서 당시 공공연구기관 노조들, 기관들 엄청나게 많은 성명도 발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함께 기자회견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고했지요. 이런 R&D 예산 삭감은 긴축이 아니라 미래를 절단 내는 거다, 그리고 청년 연구자들의 사다리를 완전 걷어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흔히 씨나락마저도 다 까먹어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결과 연구인력들이 많이 이탈되었고 과제가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장비가 그냥 놓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내년도 R&D 예산이 35조 이상으로 그래도 복귀가 되었습니다만 참 다행스럽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23년에 5조 2000억 원, 약 16.6%를 삭감했는데 정말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었지요. 그 결과는 지금 참담하게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그때 그렇게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영향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의 답변에서도 드러났지만 R&D 예산이 그렇게 역전을 한 것이 일반적인 중단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로 중단된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런 부작용이 올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현재까지도 심대하다 이런 답변을 이미 많이 드렸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정부의 R&D 예산을 대개 보면 과기부나 산자부나 또 여러 부처에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져 있는데요. 역추적해 가면 이 R&D 예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구인력의 이탈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다음에 장비들의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과제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게 얼마나 있다든지 이런, 다 이게 계량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 데이터를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어떤 예산 행위가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가 하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그것을 계량화하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의 통계를 따로 잡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그런 방식으로는 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성무 위원** 우리가 지금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빠졌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그때의 그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이 정말로 그렇게 어치구니없이, IMF 때조차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늘렸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그러면 이 정도의 국가적으로 큰 폐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백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와 그 조사를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기해 주신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는 사실은 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학기술 분야의 R&D와 관련해 국한해서 우선 구체적으로 역추적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관계 장관과 의논해 보고, 지금 말씀은 다른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훑어보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허성무 위원**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그 예산이 감액되면서, 축소되면서 기존에 수행되던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거나 장비들이 놀게 되거나 또는 연구인력이 이탈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조사를 해서 백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경험해보거나 실제 해 보지 않은 사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해 본 이후에 필요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의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정점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성호입니다.

○**정점식 위원**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를 기필코 해내겠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추석 전에는 대충 열개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개라고 하는 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한다 이런 정도를 정부조직법에 담는 걸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장관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표현이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보완수사권마저도 없애고 기소권만 검찰에 남기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권력자나 범죄자에게 검찰이 불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지난 70년 이상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축이었고 그동안 제도 개혁과 자정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검찰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강하게 받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 중수청 등 다른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적 견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보다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헌법이 보장하는 이 안전장치를 스스로 무력화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무력화한다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의 착수, 진행 또 수사의 종결, 그 이후의 기소, 공소 유지 또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나타났던 검찰권의 오용이나 남용, 일각에서 얘기하는 정치보복 수사 또는 표적 수사 또 반대 측면에서도 봐주기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신이 검찰에 대한 개혁의 요구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논의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인권보호를 강화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 통계를 한번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재산범죄의 수사 지연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 검찰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019년에

142.1일에서 2023년에는 312.7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지연은 결국은 과연 누가 그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형사사법시스템의 통계에 의하면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으로 인한 어떤 국민적 불편을 해소할 만한 장치도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께서도 변호사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오래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오래 하시고 그리고 형사사건도 많이 변론을 해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형사사건은 거의 말지 못했었습니다. 민사사건만 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결국은 수사가 복잡한 것,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되게 어렵습니다.

○**정점식 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그 이전에는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수사를 바로잡아 왔고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 요구라든지 채수사 요청 등을 통해서 계속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아 왔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점식 위원** 현재 보완수사, 채수사제도는 지금까지 수사 단계의 오류를 걸러 내면서 피해자의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 온 최후의 안전판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검찰의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이전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부산 돌려 차기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해 가지고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한풀이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경찰서장 뇌물 사건이라든지 의정부 경찰관 뇌물 사건은 검찰의 채수사 요청 등이 없었다면 은폐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부 성추행 무고 사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억울한 피의자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이 기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채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3개월 이상 응하지 않은 비율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27~28% 정도 수준이었으나 조정 이후에는 약 40~50% 수준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통계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소위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그 상태로 기소할 수 없어서 다시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게 보완수사 요구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점식 위원** 그만큼, 소위 21년 상반기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43.5%였다는 것은 거의

절반 가까운 경찰 수사가 제대로 기소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검찰에 기록을 인계했는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채 혐의없음 처분됐다, 불송치 결정되었다라고 판단한 검사가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거의 절반 가까운 사건들이, 그게 불송치 사건이든 기소의견 송치 사건이든 경찰의 절반 가까운 수사 결과가 다 미흡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하여튼 현재 부실 수사 또 한편에서는 봐주기 수사 이 두 행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내지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완수사 권한마저 무력화한다면 수사 단계의 오류를 시정할 길이 사라지고 부실 수사, 부당기소가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이의를 국가수사위원회에다 한다고 하는 조항도 있고요. 어쨌든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 수사의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장관님, 물론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위 재산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거의 담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금 현재 베테랑 수사관은 부족하고 그리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인력·예산은 보장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건만 경찰로 몰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 건수를 보면 21년 대비 22년에는 5만 2000여 건이 늘었고 23년에도 전년 대비 3만 2000건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도 사건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필수다, 중수청 신설보다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하고 검찰이 통제하는 구조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완적 의견 청취 내지는 경찰과 검찰과의 협력관계,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불의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능까지 모두 걷어 내 버리면 전문성 없는 수사, 사건 지연, 피해자 방치만 더 심해질 겁니다. 경찰이 현실적으로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결국은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흔들리는 수사기관만 남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요 대륙법 국가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든지 종결권을 인정하면서 사법 통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미법 시스템에서도 사법경찰과 검사 모두를 완전히 분리하는 곳은 없고 경찰에 많은 것을 주는 일부 영미법 국가에서조차도 결국은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도 검찰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편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의의신청 등을 담당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폐단들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경찰은 이미 행안부 소속인데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게 되면 수사권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또 일부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둔다고 하면 과거의 법무부의 특수부를 바꿔서 중수청으로 바꾼 거고 이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저의 명확한 입장은 없고,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양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정점식 위원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들, 특히 재산범죄를 포함한 중요 사건들을 전담하라는 게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 특수수사 역량, 그러니까 소위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순수한 공무원 뇌물 사건이라든지 재산범죄, 경제범죄 대응 등에 대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장관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하는 범죄들—금융, 주가조작 또는 조세 관련 사건들—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중수청에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기존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지금 현재 경

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역시 경찰 중심으로 이런 중수청을 설립한다는 안 아니겠습니까,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검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그리로 이전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 중수청, 공수처를 모두 통솔하게 된다면 사실상 정치권력의 수사통제기구가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한 지적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가지고 과연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전문가들조차도 장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사건을 한 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권력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는 민주당이 말하는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정치 통제 강화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어떠한 수사기관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권력, 대통령 그리고 국회 두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형해화됐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 점이 좀 명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나온 법안에 의하면 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어쨌든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 국수본까지 다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민주당과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9월 25일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그 원칙만 합의가 된 건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결국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이름뿐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도 법적 대응력 강화도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개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범죄자는 살판나고 피해자는 지옥이 되는 형사사법의 대혼란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장관님, 26일,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에서 성명서를 내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보

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 청년변호사 모임에서는 21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사건종결권 부여, 보완수사 요구 중심의 사법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복잡한 절차와 각 기관의 사건 책임성 약화 등으로 사건 핑퐁, 수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청년변호사 모임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8월 말 이후에 한국일보에서 ‘검찰개혁, 관건은 설계다’라는 기획 기사를 계속 여러 차례 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다 읽어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문제의식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어쨌든 그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들을 독점하면서 생겼던 폐해, 표적수사 또는 정치 보복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형태든지 수사와 기소를 가능한 한 분리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위원** 장관님, 진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70년 이상 계속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은 그 중심점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한 검찰 제도, 국민을 위한 수사 제도 체계 정립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결국 변호사 생활도 하신 전문가시니까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의 의견도 들으셔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어쨌든 국회의,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여야 법사위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의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동료·선후배 위원 여러분!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는 처음입니다.

먼저 남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이어서, 혹시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안 나오시고 차관님이 나오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박희승 위원 나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 대선 때 유세장에서 자주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전공의 복귀가 결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리겠다던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하나둘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귀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 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은 70~80% 수준인 반면 전북 지역 수련병원의 평균 지원율은 56% 정도이고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 수준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율은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 중 일부는 그동안 지방 병원에서 일해 왔는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응급실이나 병동 운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마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해 발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서울이 3.02명인 반면 대구 같은 데는 0.59, 전북은 0.36으로 의료 인력 불균형이 지금 도표에 보듯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시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박희승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지역·필수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질환별 센터를 운영하거나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아마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필수적인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의료 인력 집중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심각합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어진 기조실장 업무보고에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보도를 통해 빠르면 2028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칭이나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공공의대는 대선공약이자 현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제가 작년 7월에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도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정부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정부 측에서 여러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수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부분은 2018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었는데 아직도 마련하겠다고 밝혀서 구체적인 추진 타임라인과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 그리고 또 지역의 의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현재 계속 역할 분담이나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료계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마지막에는 법률에서 근거를 만드는 작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예산이 먼저 반영돼서 사실 땅까지 지금 50% 이상 부지 매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법안 통과가 안 돼서 계속 미루어져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절대 의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보류돼 왔는데 지금은 작년의 의료대란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49명의 의사 티오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북대·원광대에 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미룰 게 아니라 또 의료계 입장을 들을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듣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실천하는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의견 수렴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의 추계나 기능에 대한 설정 그리고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정책에 대한 기획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다시 그런 의정 갈등이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희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실천 단계 아닌가, 그래서 의사 증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는데 지금 남원에 만들려는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사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를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시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국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땅도 50% 이상 매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남원의료원이 도립병원인데 지금 270병상이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대에 필요한 500병상이면 조금만 확대하면 충분히 500병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갈수록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시작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남원뿐만 아니라 또 의료 사각지대인 여러 지역에서 의대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걸 다 같이 하려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준비가 된 부분은 빨리빨리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장관님께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취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포괄적인 그런 기획이 필요해서 같이 놓고 검토를 하되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참고로, 하도 법안 진행이 늦어져서 제가 오늘 자로 보건복지위로 다시 사보임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입법 속도를 낼 텐데 장관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장관님 대신 강희업 차관님이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박희승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토부의 이스타항공, 전라북도에 적을 두고 있었던 이스타항공 운항 면허 허가 과정에서 정치 보복이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로 60일 이상 운항이 중단되면서 2020년 5월 항공운항증명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주식회사 성정은 이스타항공 지분 100%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에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첫째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발급 심사 최종 관문인 비상탈출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다며 끝내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항공운항증명 허가가 나지 않아 성정은 8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VIG파트너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100%를 확보한 다음 날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허가를 내 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토부는 주식회사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후 상당 기간, 약 1년 반 동안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허가를 내 주지 않았고 잘 아시다시피 항공사는 운항이 안 되면 적어도 매달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취득 직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허가를 내 줬습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 이스타항공은 VIG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스카이투자목적회사가 100%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VIG파트너스는 자사 소개에 따르면 중견기업 바이아웃 투자에 집중한 독립계 사모펀드 전문회사이며 6인 공동대표체제로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변양호, 이재우, 신재하, 박병무, 이철민, 안성욱으로 스카이투자목적회사는 VIG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사

모펀드입니다.

2022년 6월에 이스타항공이 비상탈출시험을 합격했고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재무자료 제출 관련자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의뢰를 했고 AOC 발급심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타항공에 윤석열 정부가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의 집안이 소유했던 항공사였습니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힘겹게 버텨 온 2년 가까운 시간을 견뎌 내며 기적처럼 다시 얻은 기회라며 임직원들이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은 2022년 9월 불입건,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스타항공의 재기가 불가능하게 된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큰 것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없었는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좀 더 치밀하게……

○박희승 위원 주식회사 성정은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서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항공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그런 사유를 들이대면서 1년 반 이상 운항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가 사모펀드 회사가 삼사백억 제시하면서 인수하니까 바로 운항허가를 내 줬습니다.

지분을 취득한 VIG파트너스는 아까 말씀드린 6인의 공동대표체제 사모펀드인데 성정에 상당한 기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허가, AOC의 허가를 내 주지 않은 이유 또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취득 과정에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VIG파트너스 지분 구조와 자금, 투자자 현황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국토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부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차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그 내용들은 그 당시에 서류가 허위로 제출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착오가, 착오인지 어쩐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변경면허와 아울러서 AOC 운항증명 부분에 그때 보류를 했던 상황인 것까지는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변경면허라든지 운항증명 취득 과정 거기에서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 국토부 차원의 행정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통해서 망한 회사를, 1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한 회사에게…… 항공 운항을 해야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 반 가까이 운항 허가 핑계를 대면서 미루면 어느 누가 그 회생절차에 참여하겠습니까, 더구나 국가가 운항 허가를 안 내 줘서 이렇게 회사가 절단이 났다면?

그래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 지금 전주

검찰청에서 아주 혹독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문제 때문에 수사해서 기소하고 굉장히 혹독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판을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래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더구나 이 사모펀드에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관여돼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도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일부 들어갔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모펀드가 정말 1100억 주고 인수한 것을 1년 반 만에 이 사람들은 300억, 400억 주고 인수해 가지고, 인수하자마자 바로 운항 허가를 국토부에서 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정이라는 회사는 불과 1년 반 만에 좋은 일 하려다가 한 800억 정도를 순식간에 날려 버린 거지요.

정성호 장관님, 우리가 지금 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물론 수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혁할 부분이 많습시다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기소 분리가 도입된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련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박희승 위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직접적으로는 없습시다만 사실은 이스타항공을 이렇게 괴롭힌 데에는 멀리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그다음에 그거를 수사해 가지고 기소해서 아마 재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것과 관련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성정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국토부에서 아마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고발하거나 고소할 부분이 있으면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갑 국회의원 김성희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농락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먼저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입니다.

○**김성희 위원** 국가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여기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미 보도가 됐습시다만 종묘가 가진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종묘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지금 종묘를 포함해서 많은, 경복궁이라든가 고궁·국릉에는 지금 세계인들이 거의 연 1200만 명이 오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세계유산 종묘에 작년 9월에 김건희 씨가 이 공간을 사적으로 차담회를 했다는 의혹 이것이 사실로 내란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보도에도 이어졌고요. 물론 이전 청장 때 일이긴 합니다만 궁능유적본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문도 게시를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서 나온 조치라고 보겠습니다만 사과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사과문 보면서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과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규정을 읽어 봤는데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건희 씨가 국가원수입니까? 아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성희 위원 그리고 소위 차담회라는 것이 이게 국가 행사였습니까? 정부 행사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규정상 해석하면 ‘이것은 못 하는 행사다’라고 되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무슨 규정 타령을 하는 것인지, ‘나는 잘못이 없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모르겠다’라는 궁능유적본부장의 발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 이 지도가 뭐냐 하면 궁능유적본부에서 김건희 씨가 오기 전날 김건희 씨 측에 이메일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성희 위원 유적지에 차량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김성희 위원 저기 당연히 걸어 다녀야 되는 데인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소방문, 소방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 좌 상단의 소방문을 통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빨간색 선으로 쳐져 있는 데 이렇게 차를 끌고 오셔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된다고 안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

시면 된다.

실제 김건희 일행을 태운 차량이 종묘를 들어와서 저 빨간 선대로 이동하지 않고 처음에 보이는 영녕전에 내립니다. 그리고 영녕전을 관람한 다음에 그 일행들이 이 끝까지, 망묘루까지 가서 망묘루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것 조선시대 왕들도 해 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능유적본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망묘루 차담회라고 자꾸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날 망묘루만 사용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영녕전에 내려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영녕전 한번 보시지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저 영녕전에 먼저 가서 거기를 구경하고 도보로 이동을 했는데……

경상관리일지 잠깐 보여 주실까요?

저기에 보시면 손으로 써 봤습니다만 저 영녕전을 대청소를 시켰습니다. 직원들이 매달려서 저 영녕전을 청소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는, 사단장 등장하면 빗자루 들고 나와서 전 부대원이 쓰는 것을 그것을 지금 국가유산본부가 한 겁니다, 유산청이.

그러면 아까 전 그 지도를 다시 보시면요 영녕전을 지나치면 가운데 있는 정전, 저기 정전을 지나쳐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날 어떻게 했느냐?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관리소 측에서 공사 측에 전화를 해서 ‘오늘 오지 마라’, 이것도 군대에서 사단장 하는 식이지요. 트럭 같은 것 얼씬도 못 하게 해라 하고 저 정전을 구경한 다음에 망묘루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근무일지를 확인해 봤더니요 심지어는 종묘 내부의 카메라까지 꺼 버렸습니다. 이것 무슨 범죄영화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내부카메라 일시중단’ 해서 14시 50분부터 16시 2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카메라가 안 돌아가게 한 겁니다.

궁능유적본부장의 말대로 하면 국가 행사인데 이것 CCTV 촬영을 왜 중단합니까? 무슨 근거로? 저렇게 꺼 놓고 김건희 일행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 놔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해명에는 테이블 좀 갖다 놓고 꽃 정도 갖다 놔다라고 변명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 놔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까지 옮겨서 말 그대로 김건희 개인 카페를 만든 거지요.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받고 보니 이렇게 자세히는 아직도 보고가 안 들어왔고 해서 지금은 우리 법률팀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저기 차담회 했던 장소는, 망묘루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장소고요. 지금 이렇게 동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건 아주 심히 우려되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김성희 위원 자, 경상관리일지를 계속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노란색은 뭐라고 써 있는 거냐 하면 영녕전 대청소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 줄을 그어 놓은 것은 망묘루 냉장고 운반 설치, 시원한 걸 드셔야 되니까 냉장고까

지 옮겨다 놓은 거지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망묘루 형광등 교체, 그다음에 거미줄 제거 청소 이런 걸 시킨 겁니다.

아까 전에 영녕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1년에 두 차례 정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나가서 보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저기를 쓸고 닦았을 직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정부 행사도 아닌 행사에 동원이 되어서 말이지요. 그 일지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건희 일행이 차담을 진행하고 저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직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의 아주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유적이구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국가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가서 이쪽은 가시면 안 된다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실에 보낸 문서를 보시지요. 궁능유적본부 및 종묘 직원은 차담회에 배석 및 참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거지요. 즉 김건희 일행들끼리 자기들 마음대로 유유자적 저 공간들을 다 넘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국가유산을 이렇게 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지도 놀랍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똑바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놓쳐 버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묘라는 세계적 문화유산 보호의 의무를 유산청이 등한시한 채 권력자 김건희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됐던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본부장 말마따나 규정이 미비되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에 취해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황후놀이를 즐긴 김건희 씨는, 이것 분명히 권력남용이라고 봅니다. 해서 김건희 씨는 형법상 강요죄가 적용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명령하고 계획했던 문화체육비서관, 이건 직권남용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능유적본부장도 자기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겠지만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감사를 통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당국에 김건희 일행 그리고 당시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서 고발하고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국민들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인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을 제가 청장으로 서 드립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이 이미 밝혀져 있고 밝혀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적 이용과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감사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해서 엄중히 문책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갖고 계신 장소 사용 요금표입니다. 이 요금표에 제가 보니까 건물 내부 사용, 건물 외부 사용에 따라서 가격이 다 산정이 되는데 주말은 두 배를 받더군요, 휴관일은. 얼추 계산해 봐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김건희 일행이 사적으로 차담을 즐겼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한 청구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면 다음은 초고가주택 취득세 중과 처분과 관련해서 총리님께 몇 가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무조정실 문제인데요.

총리님, 혹시 더펜트하우스청담, 일명 PH129라고 부르는데요. PH129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에테르노청담,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익숙한 명칭들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우리나라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5개 아파트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한두 개는……

○김성희 위원 펜트하우스이고 굉장히 비싼 곳들이라서 공시지가로 90억이 넘고 실제 거래는 100억~200억에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조세 당국은 말씀드렸던 이 5개 아파트를 전부 다, 이 펜트하우스들을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실 확인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1월에 나인원한남에 대해서 시행사가 심판을 제기해서 조세심판원이 ‘이건 고급주택이 아닌 게 맞네요’라고 하면서 무려 800억 원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총리님 계실 때는 아니니까 더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이 아파트, 맨션, 펜트하우스가 고급주택이 아닌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시가 9억 원이 넘는 연면적 단층 245평방미터, 소위 한 8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복층의 경우에는 274평방미터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8%p 중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이걸 피해 가려고 면적을 아주 조금 줄입니다. 보이시지요? 274평방미터인데 중과 기준과의 차이가 PH129 같은 경우는 0.04평방미터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0.04평방미터가 얼마나면 총리님, 이 종이가 0.062평방미터입니다. 이 종이보다 작은 크기만큼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취득세가 1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아니, 법을 지켜서 했는데 무슨 문제냐. 종이 한 장만큼이라도 작게 했으면 작게 한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건설사들이 과세 당국을 속이고 있는 꼼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세대가 전용으로 해서 자기들만 쓰는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공간 등이 있는데 이걸 공용으로 대충 놓쳐서 넘어간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이게 워낙 감춰져 있는 집들이라 내부 사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럼 전용 주차장은 복층형 가구에만 주는 펜트하우스 전용 주차장이라고 부동산 업자들과 유튜브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념인데 건설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 위로 배관이 지나가고 있고, 주차장 위로. 그리고 이 주차장 리모컨을 관리사무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용이 아니라 공용이다. 그러니까 저 면적—A4용지 한 장 면적—만큼만 넘어도 중과세하게 생겼는데, 저 주차장이 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아, 그렇군요’라고 조세심판원이 넘어가 준 겁니다.

왜 사실 확인을 안 했다고 제가 확신을 하나면, 보시지요.

한 세대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홀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전용 공간이나 공용 공간이나로 싸우는 건데 저렇게 좋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공용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했던 처분청인 서울시가 가서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서울시는 그나마 걸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세무조사 당시 엘리베이터의 전용 세대 층 외에 다른 층을 눌러도 눌리지 않게 되어 있던 걸 확인했다. 즉 가서 3층, 2층을 눌러 보니까 안 눌린다라는 거지요.

한 펜트하우스가 한 층만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건 바로 그 집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랬는데 건설사하고 로펌에서 다른 세대 층도 갈 수 있다는 주장만 듣고 조세심판원이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습시다. 검증도 하지 않고요. 건설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다음에 문서, 가이드북 이런 걸 읽은 다음에 ‘이거 공용이 맞네요’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려 800억 원의 세금을 그냥 깎아 준 거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세심판원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이 조세심판원의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문제를 삼거나 세금 이렇게 매겨라 저렇게 매겨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총리님께서 지금 쪽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저렇게 고급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구나’라고 수긍할 것이 아니라 현장은 가서 좀 돌아보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상식선에서 공감이 되고 저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규정상으로도 접근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규정상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까지 포함해서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장관님과 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니 총리께서 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런 조세 부정이, 이게 사실 조세심판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고급주택 중과 제도, 도입 당시의 면적 기준을 지금까지 고집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성장을 하고 굉장히 생활도 다각화가 됐는데 지금도 면적만 넘지 않으면 고급주택이 아니더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이런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지방하고 수도권이 다른데 거꾸로 지방에는 10억짜리 좀 넓은 집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방금 보신 대한민국 랭킹 5위에 드는 모든 펜트하우스들은 고급주택이 아닌 것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장관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제가 전임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관련해서 조세 부정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이 의견에 공감을 해서 자기들이 제도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면적 기준을 그냥 삭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비싼 집이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를 했는데……

행안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얘기하고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번 달에 물어봤는데 이제 중간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꼭 이런 데 나와서 장관님께 문제를 삼아야 그때서부터 관료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로폼이 수익을 내는 구조 중의 하나인데 면적 규정을 애매하게 두고 이와 관련해서 조세심판원에 시비가 걸리면 여기에 전관들이 막 달려들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800억짜리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800억을 아껴 주면 거기에 수입료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로폼에 들어가서 이런 것의 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1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세심판원이 800억의 세금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내려 버렸고요. 조금 전에 보신 대로 10억이 넘는 지방의 주택들은 고급주택으로 고통받고 있고 서울에 있는 주택은 거래가가 200억이 돼도 고급주택이 아닌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으로 추진력을 갖고 계신 장관님께서 조금만 좀 살펴 주시면 저는 기준을 만들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을 좀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동의하고요. 조세 형평의 문제 그리고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조세 제도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장관님, 차관님 여러분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는 총리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조배숙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전과 관련해서,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안 나와 계시고 그리고 또 외교부장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국가에 있어서 외교 의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배숙 위원** 과거 의전 잘못으로 전쟁이 촉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전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요. 상대국 공항에 내릴 때부터 떠날 때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항 도착 시에 미국 측은 당연히 국무부 의전장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부의전장하고 군 대령만 배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변명했지만 그 사유, 구체적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대통령께서 이렇게 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장대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올 때는 너무나 그런 의전이 없었습니다.

정상국가 간 외교 의전에서 의전장의 영접 생략은 사실상 결례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을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한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방문하는 그 형식에 따라서 공식 국빈 방문부터 실무 방문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에 맞는 의전이 있고……

○**조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그 각각에 맞는 방문 형식이 있고, 의전의 형식이 있고 그 의전 형식을 가지고 상호 의사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사 교환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최소한 의전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부의전장이 선글라스 끼고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저는 이때부터 미국에서 우리한테 격하된 의전을 해 줬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묵는 장소도 보통 블레어하우스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에도 그때도 똑같이 블레어하우스가 수리 중이라고 해 가지고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좌파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마다 블레어하우스 수리가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셨는데 특정 성향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호텔을 특별하게 배정할 그런 생각 할 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글썄요, 그런데 나타난 것이 그거거든요.

자, 우리 당의 한 의원은 과거 문재인·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방미 시에는 실무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어하우스 숙박과 정상급 의전이 제공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한테는 초특급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동맹입니다. 이 동맹에 대해서 부의전장 영접만 제공한 것은 저는 외교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부터 좀 시끄러웠는데요. SNS상에……

다음 것 트시지요.

지금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총리께서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조배숙 위원님께서 정치적 경륜이 풍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정상회담이 이미 진행이 되어서 정상회담의 성과라든가 진행된 내용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착 때의 영접 문제나 숙소 문제나 이미 지나간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한 저 내용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조배숙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제대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미스언더스탠딩은 교회의 압수수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조배숙 위원 혹시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그런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굉장히 내용이 풍성한 대화가 오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굳이 저런 문제에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방송법 그리고 노동조합법, 상법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YTN이 민영방송입니까, 공영방송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민영방송입니다.

○조배숙 위원 민영방송이지요? 그러면 민영방송이면 사장은 그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해당 사의 규정에 따라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YTN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보도책임자 임명을 위해서 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이것은 어떤 사적 기업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126조에 명시한 경영권 불간섭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겁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현재로서는 위헌의 소지가 특별히 제기되고 있지 않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제기되지 않았다고요? 위헌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민주당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수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이것 이외에도 방송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용은.

다음 넘겨 주세요.

미국 또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경고했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있는 경제단체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냈어요. 성명을 냈고, 아주 간곡하게 절규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뒤에 지금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헥터 비자레알 사장이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면서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세요.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증시가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 줬어요. 로봇 관련 주가가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하청노동자 불법파업에도 체재수단이 없다면 차라리 로봇을 사겠다’ 이렇게 재계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예상으로 로봇 관련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청년 신규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전환을 가속하는 그런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 주세요.

지금 IT 업계에 AI가 확산이 되어서요, 이미 AI로 인한 채용절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저연차 개발자 대신에 그냥 AI를 쓰는 겁니다. 한 달에 27만 원 내면 쓸 수 있는 생성형 AI 도구로 신입 개발자보다 효율적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 채용 한파의 찬바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찬바람이 아니라 얼음물이 끼얹어 있습니다. 청년고용시장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입니다.

다음 또 넘겨 주세요.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 아시지요, 총리님? 단순한 실업자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포기한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벌써 50만 명입니다. 아예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막 찾으려다 못 찾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포기.

그런데 왜 포기했느냐? 그냥 자기한테 적합한, 미래를 좀 투자하고 싶은 그런 직장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청년 고용률은 1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인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내몰리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현실을 더 악화시킨 겁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정말 반대한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소통관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절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도심 재개발 현장에서 불법 점거와 봉쇄가 벌어지고 손해 인과를 일일이 따져 입증하려고 하면 사실상 면책에 가까운 시간 지연이 생긴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발주처와 시공자는 인력 축소와 자동화를 서두르게 된다. 결국 인턴,

단기 계약직 등 청년 일자리부터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요새 물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허브가 멈추면 고객 이탈,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면 쟁의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하는 구조라면 스타트업은 현금 흐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채용 공고 사라집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법하기 전에 제발 청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 과연 그런 것 했느냐 이겁니다.

개정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노동 관계법으로 노사 리스크지만 지금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리스크로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름처럼 따뜻하지 않다, 갈등을 키우는 설계는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정당한 권리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경계 위에서만 가능하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말라 이랬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입니다. 청년의 미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방미에서 돌아오시면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야 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청년과 미래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을 조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또는 상법만을 가지고 현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연결시켜서……

○조배숙 위원 극단적이 아니에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무리라고 말씀드리고요.

○조배숙 위원 아닙니다. 지금 총리께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꾸 한쪽 얘기만 듣고 그런 논리로 밀어붙이고……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그랬잖아요. 해 보다가, 그럴 일도 없지만 기업 이탈이 가속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그러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실험 대상입니까? 국가 경제가 실험 대상입니까? 우리 삶이 실험 대상입니까? 신중해야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표현은, 그때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다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저는…… 정말 제가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물론 그분들의, 노동자의 권리나 이것 인정해 줘야지요. 우리가 그것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그쪽만 하다가 한쪽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는 정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이상 투자 안 한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우리는 해외로 가겠다. 그러면 일자리 없어집니다. 이제 곧 그런 현실이 눈앞에 닥칩니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대참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러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법사위 전체회의에 가 계십니다.

○**조배숙 위원**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법사위원이어서 법사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다음 넘겨 줘 보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검찰개혁이 완전히 화두였습니다. 아주 속도전을 붙였어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검찰의 문제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에서 하는 사건의 99%는 그냥 일반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 70년 동안 유지된 사법제도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폐해와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아까 정성호 장관님께서 정점식 위원한테 질의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다 들었고 어제 답변 내용도 봤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형사 사법 정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검사한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뺏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권력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또 경찰이 지적재산권이나 재산권 범죄, 횡령, 배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능력이 아직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건을 가져가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지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그렇고 정말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아예 그냥 검찰을 없앤다, 중수청·공소청을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다시 손을 보려면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의 그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사건의 담당을 했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들도 만나서 어디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옛날에, 그냥 옛날 그 시스템에 의하면 한 3개월, 6개월 걸릴 사건이 지금 현재에서는 1년 이상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고소인들은 애가 탑니다. 오히려 피의자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의중이, 줄속 처리는 안 된다고 하다가 다시 또 추석 전에 폐지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을 넘겨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역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사기범죄가 아주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이즈피싱 그리고 또 금융 다단계 조직 사기 그리고 코인 사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형 사기입니다. 서초동 법원 앞에 보면 빨간 현수막들 붙어 있습니다. 다

들 너무 억울하다, 제발 이 사람들 엄벌해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 경찰 단계에서 이 대형 범죄, 이 조직적인 범죄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답답해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선진국은 오히려 이런 대형 범죄, 조직적인 사기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금 모성준 판사라는 사람이 현장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자기 느낌을, 여태까지의 그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빨대사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수사체계를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온 국민이 전체적으로 거대한 사기 플랫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헐 것이다.

그래서 차관님, 저는 앞으로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해당사자들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지금까지……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배숙 위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 답변 등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께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총리님께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존경하는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친환경 수소복합 경제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진입니다.

총리님하고 국방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해양경찰청

장님.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장관님…… 아, 지금 상임위원회가 농해수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차관님 와 계시나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어업협정 했지요, 한중? 몇 년도에 했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90년대 중후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2000년 어업협정 체결 시에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겹칩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평택을인데 평택에서 중국 산둥성까지는 400km도 안 돼요. 200해리를 선포하면 다 겹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질문 안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잠정조치수역 안에서는? 어업·조업이 가능하지요, 첫 번째. 그리고 해양자원을 공동 관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틀리다, 맞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이시원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PPT 첫 번째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중국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중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으신데, 조예도 있으시고 말이지요. 한중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건 일단은 띄워 놓은 거고 저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중국 하면 우리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국무총리 김민석 기본적으로 이웃 나라로서 우호적으로 지내야지요.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사 갈 수 없는 아주 좋은 이웃이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누가? 중국이 얘기합니다. 여기 중국 말로 하면 죄송해서 안 하겠습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있다’ 시진핑 주석이 항상 그런 얘기를 중국 말로 하십니다, 우리하고 얘기할 때.

저게…… 왜 벌써 사라졌어요? 저것 띄워 놓으세요, 일단.

저게 지금 잠정조치수역 안에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서해 구조물입니다.

저는 스무 살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져 왔기 때문에 중국에 지인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중국하고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서, 건설적 관계를 통해서 공영을 추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확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할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놓고 봐도 서해 강동 6주를 또 외교를 통해서 회복했듯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들을, 설득력을 담보한다면 다 듣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번 활화산같이 타올랐다가 식어 버리면 듣는 등 마는 등 합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게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많이 왜곡됐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조용하니까 그들의 스케줄대로 다 진행이 돼서 이제는 엄청난 문헌으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반문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생기고 24년도에는 두 번째로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연어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연어 양식장이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물론 저런 선란 1호·2호가 있어요. 그런데 저 구조물은 그것을 관리하는 탑이라고 합니다. 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해요.

중국이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어프로치(approach)해 가지고 남중국해하고 동중국해에서 적지 않은 국가하고 마찰이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님께서서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국무총리 김민석** 개인적인 의미 부여 이전에 저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에서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요청하면 그냥 철거할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철거를 요청하고 상호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협의를 하려면 뒤에 확실한 뭔가 지지하는 세력이 있든지 대응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다 인지하고 계실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시?

○**국방부장관 안규백** 중국이 최근 들어서 서해를 거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서해상에서 자주 확인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출몰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물 상단에 보면 레이더 같은 것이 약간 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것에 대한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 전문가는 내해화 작업일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해가 한 18m, 평균 100m 정도의 깊이를 자랑하는 데도 있는데 잠수함이 쉽게 다니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또 비공식적으로 어떤 첩보에 의하면 그런 쪽으로도 디벨롭(develop)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걸 어디까지나 제 추단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일본과 동중국해에서 말이지요, 대륙붕 협상이 결렬이 된 적이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 중간선 서쪽에 한 20개를 설치해 가지고, 가스 관련 구조물. 저것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들이 대부분 동남아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대만 해협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내해화 작업은 지금 남해 그다음에 우리 서해, 나아가서 태평양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반을 달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찰이 또 있는 겁

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시도할 경우 혹시 국방부에서는 어떤 억지전략 같은 것 갖고 있는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사상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데 지금 서해상에서, 서해 해저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작전과 현상들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음과 작용을 활용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병진 위원 그래서 이게 제 나름대로 명명했는데 기정사실화 전략, 이런 식으로 관리권을 그쪽 일대 반경 500m, 1000m를 설정해서 여기 지나가거나 들어오면 우리한테 허락을 득하고 가라고 한다든지 이럴 개연성이 농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환경조사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해군 함정이 쫓아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 것 보고 받으셨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이병진 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 주권을 침범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 철거나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외교적 수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번 중국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시종일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위층에서도 확대 정치화, 정치화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물밑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화로 해야만 이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순수하게 어프로치하면 결코, 기존의 양태로 봐서는 그냥 철거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의 기우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놓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데 중국의 양태를 봤을 때 자진 철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외교부차관님, 2차관 나오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는 뭡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실용외교입니다.

○이병진 위원 실용외교는 뭡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외교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병진 위원 친미냐 친중이냐 또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실외교라고 중국 쪽에서는 표현합니다. 실용외교는 어감상 상당히 너무 쪼대 없는 의미로 그들한테는 들리고 정확하게 무실외교라고 하면 정말 원칙이 있으면서도 강단 있게 한다, 자기주장을 명확하게 펼친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을 APEC에 초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의장님께서 중국을, 전승절 기념식에 참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우호적 한중 관계 그리고 목전에 닥친 국가적 대행사를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도드라지는 걸 저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마는 이런 구조물들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중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게끔 저희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굉장히 조용히 다루고 있으며 국장급 협의를 계속 중국 측이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서해 구조물이 국제해양법협약, 소위 국제법상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이것은 한중 간에 일단 잠정조치수역으로 양국 간이 정한 지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계속 양어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연어를 생산한다고 얘기하는데, 또 와서 보라고 얘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할 겁니다, 제가 보면. 그리고 관리 건물로만 사용하지 않고 기타의 수단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너무나 농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례 대응도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로 비례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기재부장관께 제가 여쭙보고자 하는데 말이지요, 농해수 지난 1차 추경에서 여야 합의로 605억 원을 통과를 시켰고 2차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 10억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기재부 단계에서 이게 잘려 버렸단 말이지요. 사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안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그런 농담 아닌 진실을 말씀 주셨는데, 비서실의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님 나오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예, 나와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 관련 내용 대통령께 보고하신 적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선란 3호·4호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대비책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관련 부서와 더불어 논의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해서 아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을 찾아야 되겠다, 어느 한 부처에만 이걸 맡겨 놓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TF를 따로 구성하기 전에 이미 각 부처에서, 각 부처별로도 인지하고 주시하고 있고 부처 간의 협의회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확고고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영 장관님, 존경하는 장관님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갑니다.

장관님께 제가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요. 보이지 않았던, 취임 이후에 남북관

게 암울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으로서 또 6·15 공동선언을 직접 목도하셨고 같은 해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예수세 분을 북송, 그 과정도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번 PPT 1을 보겠습니다.

여섯 분이 고향에 묻히고 싶다면서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이자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비전향 장기수는 1993년에 이 모 노인 송환에 이어서 2000년 9월 달에 비전향 장기수 83명 가운데 63명, 희망자에 대한 송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환을 원치 않았던 스무 명 가운데 지금 생존자가 13명이 계시고 그 가운데 여섯 분이, 대부분 지금 90대이십니다. 안학섭 선생은 지금 95세시고 96세, 95세, 92세, 92세 등…… 북에 가서, 북이 고향인 분도 있고 고향이 아닌 분도 있는데요 고향이 아닌 분은 나의 신념의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런 토로를 하고 계신데 인도적·인간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인도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평화는 밥이고 평화는 경제입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부터 빨리빨리 이루어 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집결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분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90대가 되셨고 벌써 2000년 이후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통일부가 아닌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야말로 인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병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최근 장관님께서 제가 작년 6월 대표발의한—네 번째 한번 볼까요—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얼마 전에 바티칸 교황청의 유홍식 사제 담당 장관께서 서울에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님과도 면담을 하셨고 저도 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신학교 때 동기생이었던 이태리 출신 주교 한 분이 서울을 오셔서 관문점을 가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유엔사에 연락을 했는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고위성직자

에 대한 경호 문제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였습니다만 유홍식 추기경께서 출국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DMZ도 내 나라 영토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내 영토도 갈 수 없다는 영토주권의 제약 문제, 내 케이스를 들어서라도 이거 바로잡아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침 이병진 의원께서 법안을 제출하신 것에 보면 정전협정상에서는 순전히 군사적인 경우에 정전 상태를 관리할 관할권을 유엔사가 갖고 있습니다라는 비군사적인 또 평화적인 이용에 관해서는 그것은 유엔사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법적 근거가 없는 판에 이병진 의원께서 제출하신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통과가 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전협정상의 문제와 조정,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 내용 중에 정부는 비무장지대 보전,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역사, 문화, 환경, 생태, 산림, 토지 이용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또 안전 및 출입 지원과 관련해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남북 간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갑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83일째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늦었지요. 그리고 또 걱정도 그리고 또 부담도 많았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우리가 정상회담 하기 한 2시간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혁명 그런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도 걱정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상회담이 시작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서 덕담을 해 주고 그리고 또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데 의자를 짝 빼 주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예우를 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회담이 잘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총리 어디 가셨어요? 여기서 딱 이제 총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지요.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느낌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아주 밝은 면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후덕 위원 걱정도 많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어제 초반전에는 SNS에 그런 내용을 올렸을 때는 걱정도 좀 됐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제 총리가 오셔서 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걱정은 많았지만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간단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간절하게 잘되기를 바라고 봤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회담이 마무리되는 걸 봤습니다.

현안이 됐던 경제 문제 또 군사 문제에 대해서 다 앞으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잡았고 또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전망을 또 공유했다. 무엇보다도 양 정상 간의 케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우호적 관계의 시작을 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여기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윤후덕 위원** 외교부1차관은 안 계시고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제가 왔습니다, 위원님.

○**윤후덕 위원**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미국 정상회담 하기 바로 앞에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닌 얘기로 감히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디 가서 또 가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 얘가지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아주 파격적인 외교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 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거예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루어졌던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서틀외교를 논의를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과거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행을 선택을 하셨다, 즉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을 연계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일 관계를 잘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한미일 공조와 같이 연계시키면서 선순환을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윤후덕 위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회담을 할 때 ‘미리 가서 일본하고 관계를 다 만들어 내서 여기 와서 회담을 해서 미리 부담되는 걸 다 해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83일 만에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게 너무 늦었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는 없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동안에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의해야 될 것을 합의하고 그리고 정상 수준에서 그 성과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조현 외교부장관이 22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데 외교부장관이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쪽의 국무장관 하면서…… 일본에서 이런 정상 회담을 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의 국무장관은 아주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새벽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좀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기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이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회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저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회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잘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하지 않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10월 말 11월 초에 우리 APEC에 꼭 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가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니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같이 만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 거기에서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다라고 했어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차관님, 나중에 장관이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위원장은 APEC의 회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초청을 받으려면 절차가 뭐가 있어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APEC은 21개의 회원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장국인 국가가 비회원도 초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APEC에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반 이상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 초청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해낼 수 있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유관 부서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걱정거리가 한 개 정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평택을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그 큰 기지, 미군 기지 소유권을 이렇게 가졌으면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건 SOFA 규정에 의해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걸 이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토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SOFA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SOFA에도 그렇게 돼 있고?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대사관 정도는 상호 간에 그런 일에 있어서 치외법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오버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글썄, 여러 가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략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거론은 전혀 없었어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국방부장관이 그쪽에 가지지 않고 여기 계시는 것 보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끝난 거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떤 형태로든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요청한 바도 없고 요구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미 작년에 양국이 다 비준을 끝낸 상태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윤후덕 위원 또 하나, B-2 폭격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B-2, 이렇게 큰 폭격기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무기로서의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측하고 CNI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CNI라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개념에, 한국형에 맞게 양국이 협의해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도 우리의 전장 거리는 이런 무기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무 시리즈가 다 있고 또 가공할 만한 무기 체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후덕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금쯤 느끼는 게,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두 분 간의 신뢰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일도 실천하고 그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지요. 정상회담……

○윤후덕 위원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또 어떻게 약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저술 등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세상사를 풀어 가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 정상과 만났을 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그 케이스들이 잘 풀리도록 됐던 사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가령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로 화제를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들을 포함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돼서 대통령의 종합적인 전략으로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또 이재명 신임 대통령님에 대한 조금 부족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런 불만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해소한 것 같아요. 그런 성과는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피스메이커(peacemaker),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 외교적으로 남을, 그러한 하나의 키워드로 남을 만한 적절한 상대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의 교류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대하다’라는 식의 표현을 나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준비를 많이 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잘했습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23일 날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17년 만에 합의문이 나왔어요. 17년 전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합의문은 5개 항이 있고 그중의 네 번째 항이 북한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분히 충실히 이행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명시했었어요.

그리고 또 양 정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얘기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것은 17년 전에도 이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북한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질문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후덕 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뭐……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가 알기로는 북이 특별히 반응 내놓은 건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고 중앙통신에서 익명으로 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통일부로부터 받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톤 다운시켜서 그렇게 한 거더라고 했더라고요.

이 합의사항 등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북핵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또 북·일도 적대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소 수교, 한·러, 한중 수교는 이루어져서 주변 4강 가운데 절반의 적대를 우호로 바꾸는 일은 이루어졌는데 지금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가 사실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를 핵심으로 한 이 문제 해법의 핵심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은 바로 일의대수,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 또 동맹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서로 불편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함으로써 미국의 이 같은 부담을 덜어 주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루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외교 문제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시간이 다 됐네.

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R&D 예산은 늘 순증을 해 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그래서 2023년·2022년·2021년 3년 동안 합쳐서 평균 순증 증가율을 보니까 8.8%가 순증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한 15%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폭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폭거라고.

그래서 2025년에 조금 회복을 했지요. 그런데 2025년에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 2024년에 예산을 삭감시킨 그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들. 그 사업들을 좀 복원시켰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과기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재구조화해서……

○**윤후덕 위원** 아니요, 포함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 313개의 예산은 없애 버렸고 그리고 한 6000개 정도의 사업은 감액 조정을 시켰어요. 그 사업들, 그 사업들을 2025년에 원상 복원을 시켰는지 그거를 여쭙보는 거예요.

그거 체크를 해 본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걸 체크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원상회복이라고 보다는 어떤 거는 더 많이 회복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게 전혀 아니고 삭감을 한 예산들은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거는 모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한 2000개를 저희들이 복원을 시켰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새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네요. 보충질의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윤후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달서 갑의 유영하입니다.

총리님 좀 쉬게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질의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날 대구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총리께서 대구시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어디서 보고를 받았다고요?

○**柳榮夏 위원**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보고받은 주체가, 보고한 주체가……

○**柳榮夏 위원** 대구시 권한대행입니다. 그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 시·도지사 간담회를 할 때요?

○柳榮夏 위원 예.

간단하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국무총리 김민석 사실 그때 그 말씀을 자세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柳榮夏 위원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시는……

○국무총리 김민석 구미, 안동 관련한 조정 그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柳榮夏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1969년부터 지금의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낙동강 본류를 주 취수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91년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가 발생한 이래 다이옥산이나 과불화화합물 등 여러 차례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는 대구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문산·매곡 정수장에서 초고도 정수처리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고도 정수처리 시설 도입 및 운영으로 인해서 일반 정수처리 공정보다는 높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보다 취수원 상류에 거의 680만 평에 달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의 위험성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를 대구시가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91년 폐놀 유출사고 이래 지난 34년간 끊임없이 취수원 이전을 간절하게 염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은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총리님, 저 사진은 울산에 있는 국보 285호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물을 공급하는 사연댐 수위 때문에 암각화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51회에 걸쳐서 침수된 바가 있고, 2014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국가유산청이 보존협약을 한 이후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해결책은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연댐 수위를 낮추게 되면 울산시민들이 필요한 일일 용수량 4만 9000t의 용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확보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인 20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기존 대구시의 취수원 중의 하나인 운문댐에서 하루 7만t의 물을 사연댐에 공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구의 입장에서는 취수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구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안에 동의할 수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댐 수위를 낮춰서 훼손을 방지한다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재 유네스코도 이에 따른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의 안전, 울산시의 취수 확보, 그다음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 이 세 가지 과제는 한 고리로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 고리를 푸는 열쇠는 대구 취수원의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취수원 이전이 가시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때 대구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t을 공급받고 기존 낙동강 본류의 물을 문산·매곡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28만t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운문댐에서 공급받던 7만t을 울산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5일 날 맑은 물 나눔과 상생 협정을 통해서 구미시와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구미시가 산업단지 입지 규제, 반도체 유치 제약 등을 이유로 구미시 상류에 있는 일선교 부근으로 취수원을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협정이 파기되고 대구시에서는 안동댐 직류를 취수원으로 하는 안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동댐 이전안은 안동댐 직하류에 110km 되는 도수관로를 설치해서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연결해 대구에 원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안동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안동댐 이전안에 대해서 사업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 확정을 위해서 의결 절차만 남겨 놓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7월 이 자리에서 환경부차관이 원점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취수원 이전안 중에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 해평취수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설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1조 1496억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취수장이 완성되고 나면 연간 관리비로 400억 원이 계속적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미시에서 해평취수원보다 그 위에 있는 상류로 옮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류의 인근 지자체인 상주시와 의성군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한 기후위기 대응 공약 중에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현되면 구미보의 수문이 개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문이 개방될 경우 용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동댐 이전안은 가장 큰 문제가 처음에 초기 시설비가 1조 8000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의 효율성도 있고 공급량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어서 무엇보다 TK 신공항이 완성되고 나면 하루에 필요한 3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지금까지 낙동강 인근 산단 등 공장이 있는 지역보다 상류의 물을 취수로 끌어왔으면 하고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지자체의 반대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만 2582일입니다. 저것은 1991년 폐놀 유출 사고 이래 대구시민이 물 걱정을 하면서 지내 온 시간들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 시간은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넘기고 방관해 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구시의 물 문제는 대구시와 지자체에 맡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공사를 하고 사업시행자도 국가입니다. 의사결정권자도 국가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안을 검토하시고 지자체의 갈등을 해소하시고 주민의 우려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유 위원님께서 아주 절절하게 또 아주 소상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내용을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환경부장관께서 이번에 죽 돌아보면서 특별히 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몇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하신 것을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환경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난 8월 7일 날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용만 놓고 보면 구미 해평취수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미시가 제안한 구미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상주시·의성군까지 조율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와 계시면 이 발언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제가 여쭙고 싶었는데 차관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아까 위원님께서도 여기 표에 보여 주셨는데 안에 따라서 경제성이 다를 수도 있고 비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구미 해평취수장 안은 경제성 측면에서 조금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지 어떤 대안을 하나를 정해 놓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지난번 언론 보도에서 해평취수장이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표에도 보여 드렸듯이 초기 자본은 사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원수 28만t을 초고도정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처리 시설비가 한 3000억이 들어가고요 매년 400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에 벌써 8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총리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91년도 구미 폐놀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화학물질 오염 사고가 대구에서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그 모든 부담을 대구시민이 안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견뎌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평취수장에서 28만t을 지금 현재 취수원에서 채취하게 되면 저희가 원했던, 화학물질로 오염된 물에서 저희는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환경부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물은 차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절 변동이나 또는 돌발 오염 사고에 대해서 완충력이 큼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높아 가지고 일반 정수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거의 70%가 댐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보니깐요 수도권은 정말 잘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취수장에서 15km를 상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팔당강 직하류에 강북취수장을 새로 조성해서 서울시민한테 정말 좋은 아리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기존의 노량진취수장을 폐쇄하고 65km에 달하는 관로를 설치해서 팔당댐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도시는 팔당댐을 수원 하는 수도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촘촘하게 격자형 광역수도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관님, 총관로 길이가 1100km입니다. 대구에서 말하는 안동댐 관로 110km에 비교가 되지 않는 관로 길이입니다.

대전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건설할 때 이미 대전은 건설에 참여해서 댐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용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세종시에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달빛동맹의 한 축인 광주시도 기존의 영산강 물이 아닌 주암댐과 동북댐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는 안전하고 깨끗한 댐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유달리 대구만 낙동강 본류에서 66%, 댐에서 3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동댐 수질 문제, 중금속 오염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지난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차관님, 해평취수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어느 안을 놓고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해평취수원과 안동댐을 놓고 비교하시되, 다만 이 취수원 이전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대구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기재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柳榮夏 위원 부총리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안동댐으로 취수원이 결정될 경우 아마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타를 통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柳榮夏 위원 그런데 해평취수원의 경우는 지난 2022년 6월 30일 날 낙동강 상류 및

하류에 취수원 확보 총사업비 2조 4000억이 포함돼서 이미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동댐의 경우는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부총리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의2와 예타 면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국민 생명이나 안전 또는 장기간 미해결된 국가현안, 광역 연계 지역균형 기여 등에 필요한 정책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91년 사고 이후에 30년간 미해결된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고요. 대구, 경북, 울산 등 광역권이 함께 얹힌 국가적 현안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해서는 저는 예타가 면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도 국가재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TK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 TK 신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돼야 된다, 롤모델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원칙입니다.

○**柳榮夏 위원** 맞습니다. 법상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액수는 제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柳榮夏 위원** 1조 1000억대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2조 2000억.

○**柳榮夏 위원** 1조 1000억대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1조 1000억.

○**柳榮夏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이 TK 신공항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1조 5000억입니다. 만약에 민간 PF로 할 경우에 민간 PF 금융비용 7.8%를 계산하면 금융비용만 14조 8000억이 됩니다. 합산하면 26조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금액을 1개 지자체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안이 기부 대 양여만을 고집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특별조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전 부지 개발수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면 국비로 적자가 보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임의조항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요. 국가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柳榮夏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원래 2025년도에 신공항이 착공이 돼서, 기본설계가 끝나서 착공돼서 2030년에 개항이 목표였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개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같이 이전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활주로하고 관제탑은 군공항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만약에,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사업이라서 저는 바로 실시설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이 완성되더라도 군공항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짜리 공항입니다. 왜? 관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공항이 반드시 같이 동시에 이전돼야 개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지금 대구시가 말하는 대구시가 주체가 돼서 공영개발을 하는, 저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여기 총리, 부총리 와 계시지만 대구시가 요구하는 공자기금은 국가재정 상태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적습니다. 그래서 대구 신공항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은 국가기반시설 SOC처럼 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재정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시민들이 30년간, 아니 50년간입니다. 50년간 K-2 공항이 우리나라의 가장 전략자산 공항 아니지 않습니까? 미 공군도 주둔하는 그런 공항입니다.

오늘 다행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떤 연유에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대통령께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하면 저는 신공항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잘 아시다시피 K-2 공항은 국가 최고의 국방시설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에 재원 조달 문제로 지금 현재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방 예산을 활용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구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공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셔서 광주공항은 TF를 설치했는데 대구는 뭐냐? 너무 홀대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액될 국방비에 대구 신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원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장관님과 여기 계신 총리님께서 힘을 좀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柳榮夏 위원 답변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용자의 필요성은 공감입니다. 공감이 되는데 아마 재정 당국에서 이 공공자금에 대해서는 기부 대양여 방식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K-2 대구 군공항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뽑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성공을 해야 된다. 다만 이게 한 700만 평 정도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榮夏 위원 544만 평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주변까지 합쳐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경기적인 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이 부진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유명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오산시 국회의원 차지호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미래 전략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전략 관련해서 제가 봤던 가장 미래적인 정치인 중의 한 분이 총리님이신 것 같아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총리님을 중심으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결위 와서 논의되는 것들을 보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단기적 현안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정부 초기이고 그리고 다음 5년의 이재명 정부가 결국 2030년대 혹은 40년대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대전환기의 서막을 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향후 5년에 만들어지는 여러 정책들이 아마도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을 하고 대비해야 될 현안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겠지만 그 부분은 기후라든지 혹은 인구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도 대한민국의 초저출생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인구들이 폭증하고 선진국들은 인구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이런 불평등이, 패턴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팬데믹이나 이런 반복되는 위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빨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바꾸는 거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들이 인공지능의 산업적인 혹은 과학기술 혹은 산업적인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니까 혹은 중국이나 미국은 저 멀리, 멀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산업과 경제의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총리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이 만드는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변환들에 우리가 얼마나 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그것 관련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AI 전환의 규모와 속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우리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결국 인공지능이라 표현을 하지 않고 인간 수준의 혹은 인간과 같은 사고력과 지식 생산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능체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기술만 해도 의사들보다 진단력이 훨씬 더 높은 AI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금융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람이 하고 있는 부분들의 상당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쪽으로는 우리가 가진 직업의 상당수가 AI 시대 때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노동자와 AI가 결합해서 생산성이 높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노동자들의 일을 대체해 버리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보건복지 시스템 자체도 AI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냈고 동시에 AI 사회 전환, 우리가 그리고 AI로 맞게 될 경제 시스템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공약에서 AI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AI가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전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AI 대전환이 우리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포인트다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성장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AI 관련 15개에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결합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산업전략으로서의 AI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각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하지?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하는 거지?’라는 부분에 대한 일상적인, 일종의 인문학적인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래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러한 연구가 진행될 때, 그것이 함께 될 때 이런 산업적인 노력이 함께 빛을 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반 부처에서 이것을 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한, 국책연구원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집중해서 아마도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게 되실 국가AI위원회와는 협력 또는 별개로 그런 사회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지호 위원** 총리님, 제가 염려되는 지점은 그런 AI 전환의 규모, 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료시스템, 교육시스템 혹은 국민들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들을 대체하게 될 이런 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 거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대전환 부분은 향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 거기에서 다음 5년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사실 그다음 AI 사회에 대한 원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국책연구기관이나 말씀하셨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담론들이 형성되고 근거들이 형성되고 그것을 부처에서 검토하고 그리

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보고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이 변화가 다음 5년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변화가 국민들이 가진 불평등성을 굉장히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질지 혹은 굉장히 높은 실업률, 사실 이 정도의 전환은 IMF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충격이 다음 5년 안에 일어나게 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변화가 미래 일이 아니고…… 지금 IT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40대 정도의, 한 15년 정도의 경험을 갖추었던 개발자 팀장이 수많은 신입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뽑아져 있는 사람들을 구조조정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대부분의 코딩 개발들을 대체해 나가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IT 쪽에만 있겠습니까? 의료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전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식의 변화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고 고통을 겪게 될 때는, 정부는 그 전에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가 법제화하고 정책 만드는 이런 사이클이, 그래서 그게 시행되고 결과를 만들 때까지 3년에서 5년은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연구하고 지금 뭔가 준비를 했을 때 저는 이 사이클을 못 맞추까 봐 가장 걱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AI라는 기회요인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불평등성 혹은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근본적인 대안의 솔루션을 줄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AI가 사람들을 실직시키고 혹은 기존에 가진 불평등성을 격화시키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의료나 여러 가지 기반 시스템들이 해외에 있는 민간기업에 의존하게 될 때 저는 그런 미래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염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의 출발선이,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게 되는 이 출발선이 AI 경쟁에서는 굉장히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술도 어느 정도의 격차를 벌리고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들에 따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형편이고 그런데 제가 좀 더 염려스러운 것은 AI가 기술 혹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본과 데이터 이 두 가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본은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AI에 투자하는 예산이 미국의 9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민간기업의 수분의 1 정도 되는 예산들을 한국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본의 초격차와 함께 데이터가…… 한국의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데이터가 데이터 아키텍처를 아무리 잘 구성한다 한들 중국 같은 경우는 14억의 인구에 기반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혹은 미국 서부에 있는 민간 기업들, 수십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디지털 인구,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수십 분의 1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하고 AI를 어떻게든 산업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출발선상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올바른 전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십 분의 1의 자본, 수십 분의 1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격차가 나 있는 AI 기술들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이고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하겠다는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한 전략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염려가 되는 지점까지 하고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려되는 지점은 그래도 이런 막대한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가진 소버린 AI라는 관점들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 AI가 될 수도 있지만 갈라파고스 AI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은 몇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데이터 여기에, 국내 자본과 국내 데이터에 의존을 하고 국내 기술들에 의존해서 가고 있고 국내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소버린 AI, 국민주권 AI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가 사실 잘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객관적 인식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지,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희망은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희망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전략을 만들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AI를 국가성장 전략의 핵심 전략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앞서가는 나라들이 압도적인 자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나? 흔히 이야기하는 소버린 AI를 포함해서 어떤 AI 국가 전략으로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또 대통령비서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AI와 관련돼 있는 분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러면서도 일정한 판단의 기준을 가진 분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전략의 선택 문제는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강점이 있느냐, 바이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산업에 있어서의 전략적 측면 외에 AI 대전환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적 이슈라는 문제도 지금 제기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에서도 좀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당정이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이번에는 한국이 가진 강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본이나 데이터 면에서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전 세계적인 AI 전환의 흐름들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챗GPT나 이런 식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경쟁도 있지만 이다음에 만들어진 산업 혹은 사회 생태계는 AI가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전환하는 곳에 여러 산업 동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어느 정도, 우리가 휴먼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부르지요, 인간의 지식시스템 혹은 지능시스템이 잘 자리 잡은 국가에 대한 수요보다 중저소득·개발도상국들, 아시아·태평양 지역 혹은 중동의 지역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의 소셜 시스템, 사회의 여러 가지 필수 시스템이 AI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산업 규모로 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2032년경에 전 세계 보건의료시스템과 관련된 전체 비용들 혹은 시장 규모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6경이 넘고요. 지금 여기서 포화시장인 선진국시장 말고 미충족시장인 개발도상국만 해도 연 2경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도하는 기업이나 국가들이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의사들 어떻게 수출합니까? 수출을 못 하지요. 그런데 AI에 기반한 AI 헬스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랫폼들 제대로 구성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수한 바이오·의료 인력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서 그 시장의 10분의 1만 잡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 200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경쟁이 심한 곳에만 집중을 하고 이 AI 전환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다음—다음이라고 해도 불과 삼사 년에서 십 년 사이에 만들어질 시장입니다. 왜 여기에는 집중을 하고 있지 않고 산업전략들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저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 있는 민간기업에, 사회안보와 가까운 교육이나 국방,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민간기업에 의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직은 그 국가들에서 신뢰성이 높지 않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기술들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소버린 AI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국가들은 독립적으로 이런 식의 기술들, 사회시스템 전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과 기술, 데이터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그런 국가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마저도 똑같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여기서 AI 기본사회 이런 기본적인 소셜 시스템의, 사회 시스템의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국가의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AI 체계가 국제적으로 이런 협력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어젠다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예전에 우리가 KF-21 보라매 전투기 만들듯이 이런 식의 소셜 플랫폼,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정부의 노력으로 협의체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AI 플랫폼 이전에 국가 단위의 IT 플랫폼이 네이버나 카카오 통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됐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들이 민주적인 국가 그리고 산업과 민주주의를 같이 일으켰던 이런 신뢰도에 바탕을 둔 그리고 K-컬처라는 문화적 소통성을 바탕에 둔 한국이라는 국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치를 내걸었을 때 사실 5개에서 8개 정도 국가들은 충분히 협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그 국가의 니즈들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가오는 APEC과 그리고 유엔 총회들 혹은 내년에 다보스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런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목말라 있는 AI 사회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부처가 외교부를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있는 국내 굴지의 IT 기업들이 정부에게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 그 이유를 굉장히 꼼꼼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건 투자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그 기업들이 만든 포트폴리오, AI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을 투여해서 우리가 AI 산업들 증진시킬 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객관적인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조금 더 미래적인 혹은 글로벌 전략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AI 전환들을 앞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원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런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미국의 위치, 특히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하는 위치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유럽 같은 국가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어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글로벌 대전환기 때 국제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우리 경제와 산업 동력이 돼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계기의 하나가, 이번 APEC의 주제가 마침 AI 그리고 지속가능한 내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세계 정치학회에서도 이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AI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또는 AI 기본사회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메시지에 담아내서 아까 제안하신 필요한 나라들과의 협력까지를 담아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 을 출신 조계원 위원입니다.

2022년 5월 11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

치 판결로 파면될 때까지 1060일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거의 무너질 뻔하였고 경제와 외교, 안보, 민생 등 어느 하나 후퇴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은 파시즘 국가로 한순간에 전락할 뻔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정부가 드리웠던 내란의 먹구름을 하루빨리 걷어 내고 빛의 혁명으로 되찾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 정부는 지난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올 1월 전망치인 1.8%의 반토막입니다. 윤석열 내란의 여파로 내년 성장률도 1.8%로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어두운 경제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경제를 거덜 내고 성장잠재력마저 파괴한 현재의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을 발생시키고도 국가예산을 주머니 삼짖돈 사용하듯 부자 감세를 하고 기금을 전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불용하는 등 예산을 기준도 없이 편법으로 사용해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를 어렵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선머슴은 비교도 안 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탐욕에 의해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혹이 무성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빙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북방 외교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러시아를 적대시하여 북한의 혈맹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주가조작범들이 5배의 차익을 실행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수십조 원의 혈세로 안보와 평화를 감당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리는 파면 팔수록 추악한 복마전, 비리의 백과사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민들에게 한 점 감추는 것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국민주권정부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총리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저는 더 이상 총리님께 답변 요구하지 않고 장관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 나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산업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 국가산단은 지역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발 증설로 인해 가동률이 급락하며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기요금, 고용, 규제 개혁, 세제 개혁 등에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현황인데 지금 여수산단의 평균 가동률은 2024년 3분기 89.4%에서 2025년 1분기에 81.5%로 떨어지고 있고 설비 가동률은 64%대까지 하락하고 공장 라인들의 쪼그라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의 올 상반기 합산 영업손실은 476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합산 영업손실은 700억 원이었는데 7배 가까이 급증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가속해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여수 국가산단의 협력기업, 입주기업을 다 포함하면 290개사에 달하고 여수 전체 고용의 42%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큼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LG화학이 2024년 3월에 여수 스티렌모노머 공장을 가동 중단했고요. 김천·나주 공장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 스크랩 결정, 사실상 철수 결정이지요. 그 공장에서 더 이상 원료를 공급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비우고 폐쇄 절차에 돌입한 걸 의미합니다, 스크랩은.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2024년 12월에 여수 2공장의 5개 라인 중 3개 라인에 대한 스크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천NCC는 얼마 전에 부도를 거의 모면했는데 2025년 8월 8일부터 여수 3공장에 대한 가동 중단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여수 국가산단의 침체로 인해서 지금 여수의 상황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업체의 경기 둔화 그리고 잇따른 폐업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의 폐업도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CSR, 사회공헌 사업들이 줄어들면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들도 대폭 축소되고 있고 지자체, 여수시의 지방세 수입은 4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난 5월 1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의 조치사항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실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악화되어 가고 있는 여수 지역의 경제 여건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말씀처럼 5월 1일에 이루어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8월 19일에 고용부가 추가로 발표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를 들면 긴급자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긴급경영안정자금인데 그 부분 지

원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신용 문제도 있고 금리가 한 3.9%다 보니 신청 기업한테는 그 정도도 좀 높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추경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도입돼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고 특히 대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협력기업들, 이들 기업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선뜻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높은 금리와 이런 것들이 다시 부채로 돌아올 게 뻔한데 이런 식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자율협약식을 가졌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업 측에서 선자구노력, 즉 감산 결정이지요. NCC 감산 결정을 하고 자구를 하면 후에 정부 지원을 하겠다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데, 책임 있는 자구노력 없이 정부 지원만을 기대하거나 감축 효과만 노리려는 무임승차 기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정부의 원칙적인 내용은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겠는가. 정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그리고 친환경 스페셜티 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기업들을 실사해서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제가 10개 기업들 대표들을 다 회사로 찾아가서 일대일로 만나서 장시간 그 회사의 상황과 요구사항 또 현재의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긴밀히 협의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 번 발표한 그러한 계획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 각각의 산단별, 3개의 산단별로 어떤 업체들끼리 파트너십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서로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하고도 함께. 그리고 저 발표 이후에 그다음 날부터도 바로 업체들과 협의를 쪽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체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치킨 게임처럼 다른 업체가 먼저 무너지면 우리가 이익을 보니 버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확실히 버리고 그리고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만 저희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큼 필요로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거의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2개가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기업의 지원체계에서는 지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기업들이 현재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니까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원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 문제입니다. 그때 전기요금 인하

에 대해서는 법적 개정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법적인 요건을, 그 허들을 넘는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석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체에 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통상 문제가 심각한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력요금 문제 쪽으로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 전반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한해서 기업의 전기요금의 인상은 낮춰 주시라 이런 요구고요. 이건 법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오히려 대통령령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규제 완화 및 사업 재편 지원, 고용 유지 및 전환 지원, 신규 설비 외국인 신규 투자 제한 또는 엄격 심사 이런 어느 문제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조계원 위원 아랍코에 의한 사한 프로젝트 말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조계원 위원 이미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더 이상의 외국인 신규 투자가 석화산업에 이루어지는 것은 정부가 규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현실화해 주시고 그리고 또 화물연대에서도 지금 이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운송단가 현실화와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게, 지난 조선업 위기 때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고 지금 조선업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더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LNG선이나 이런 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성공적으로는 수행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실업이 유발되고 고용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산업과 일자리 없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페셜티 산업 전환 없는 합병과 매각, 축소 운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의 유지 또는 업그레йд 방안이 없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이런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지금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부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고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참고삼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게 2024년에 유럽 산업의 침체를 진단한 드라기 보고서입니다. 이 드라기 보고서에

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침체 위기 중에 생산성 하락, 과도한 규제가 있는데 세 번째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제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 요금 감면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지역 기업이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골든타임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다시 한번 대통령령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노동부장관입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의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그리고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슬라이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요.

지금 플랜트 건설 발주액이 78.4%가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26.1%나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여수에서 지금 당장 더 이상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부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여수 지역의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수는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요.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7.3%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셨지요, 여수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7월 31일 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을 새로 만들었고 1호로 광주 광산구와 함께 여수시에 지정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지정은 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고용위기를 실질적으로 겪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그 준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현재 저희들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은 처음 실험해 보고 고용위기가 심화되지 않게 초기에 하자는 것인데요. 이 진행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수출과 제조업 성장의 중심이자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끈 주춧돌이었습니다. 50여 년이 넘게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노동자들의 내일을 장관님께서 부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지역 고용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하고 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김윤덕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제4차 철도망 계획을 국토부에서 발표하면서 익산-여수 간 일반철도를 복선철도로, 89.2km 구간을 고속화하겠다. 사업비는 3조 357억 원이다. 여기에 대

한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하고 진행할 것을 밝혔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 10월 31일에 다시 기재부는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라선, 익산-여수 간 38km 구간에 대해서 직선화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올해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88km 구간을 직선을, 복선화해서 직선화할 때 20분 단축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38km 구간을 단축하면서 20~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여수-익산 간 구철도 노선 중 익산-여수 간은 일반철도도 곡선철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150km/h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KTX 시대에 완전히 일반철도보다 못한 그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새롭게 검토를 해 본 것은 서울에서 용인, 안성, 청주, 세종 그다음에 전주, 남원, 구례, 동순천, 여수를 가는 한반도 KTX 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수에서 서울 간에 기존의 380km가 315km로 단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청주 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는 거치지 않았지만 300만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철도도 발주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청주에서 나머지, 세종 거쳐서 행정수도 철도교통 인프라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전주와 남원, 여수까지의 직선화 노선을 만들면 그야말로 한반도 철도 대동맥이 완성되고 남원을 축으로 한 달빛철도, 동서 간 교류 그리고 순천을 축으로 한 남해안의 동서의 교류 이 모든 것들이 균형발전 위에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가능하다면, 아직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 안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존경하는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 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총리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 또는 요청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정상들과 했던 것 같은 그런 대재앙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숙제는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난 7월 협상에 비해서 좋아진 게 무언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야당이라 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혜국이 된 것도 아니고 15%가 14%가 된 것도 아니고 과연 대통령이 거기까지 가서서 도대체 국익에 무슨 추가적인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제도 많이 얻어 온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주한미군 땅 소유권 이전해라, LNG 공동으로 개발하자, 무기 사라, 재정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숙제들을 안고 귀국하신다고 봅니다. 잘 풀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번 정상회담이 정말로 최악으로 가지 않았던 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너는 카드가 없어’ 이런 무례한 말을 던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과 같은 기업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이 아쉬워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런 푸대접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는 이 기업들이 더 잘 기업 활동을 하고 경쟁력을 북돋울 수 있는 무슨 정책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그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정말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북돋울 수 있다고 믿고 통과시키신 겁니까? 더 센 상법 통과시키셨는데 이런 기업들 경쟁력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하신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후퇴를 못 하신다면 이에 맞먹는 또는 이거보다 좀 더 도움이 되는 기업 정책도 반드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경악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발언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 또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나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정보 당국으로부터 들었다. 한국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순복음교회, 극동방송과 같은 굉장히 건강한 한국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도 학생 시절에 운동하실 때 소위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동성당, 대학교 함부로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와 그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될 기관들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가 야당 위원이기 때문에 그 1명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한국이 좀 지나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정말 실무적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으실 텐데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요청드립니다.

제 질의를, 본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위 간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오늘 교육에 관한 질문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장관님도 없으셔서 그런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임명하신 후보님보다 저희가 보기에 더 문제가 많은 후보를 임명하셔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교육 정책, 그중에서도 교육 격차와 그다음에 기초학력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교육 격차가 심각하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신 바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정훈 위원 국회에 오셔서, 오래간만에 오셔서 만든 연구단체 모임이 ‘약자의 눈’인가 그랬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정훈 위원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저도 생각했고요. 의원님 방을 지나갈 때마다 참 저 이름 좋다, 내가 왜 그걸 생각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에 101번째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총리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총리님의 복안, 한 줄 요약으로 뭐니까? 또는 이재명 정부의 생각, 한 줄 요약으로 뭐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한 줄 요약은 공교육 강화지요.

○조정훈 위원 공교육을 강화하면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가장 주된 방법으로 공교육의 강화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면 공교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또는 무너졌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꼭 단선적으로 사실은 문답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을 조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저는 총리님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조정훈 위원 저는 날 세울 생각 없습니다만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내용을 읽기 쉽게,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의 차원에서 기초학력 선도대학을 확대하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 문서입니다, 총리님. 교육부장관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저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력 선도대학을, 선도학교를 확대하겠다.

두 가지 질문이 듭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질문이 들고요. 또 특정 학교를 기초학력 선도학교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특성화고는 있고 과학중심고, 이과중심고 있는데 기초학력선도학교라는 게 이게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 깊이 생

각해 보고 하신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문해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는 기초학력이 과거만 못하다 이런 식의 개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과거의 눈이나 또는 기성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과잉이다 싶은 학력 내지는 배움이 진행되는 것도 있어서……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유치원, 영어유치원 입시도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이 총리님의 말과는 좀 다르게 수치로 증명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기초학력 미달된 학생의 추이입니다.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4단계, 그야말로 낙제 수준의 학생들의 수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에 한 명, 수학은 백에 열다섯 명이 기본적인 계산을 못 합니다, 미적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국어는 기본적인 문장을 두세 줄 이상 쓰지 못합니다.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비율이 10%를 뚫고 내려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되지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정훈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공교육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공교육 12년을 겪은 어떤 대한민국 학생들도 글씨는 읽어야 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한두 줄은 써야 되고 산수 계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시작된 것이 2007년……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5년 정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와 우리 정치계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이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다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따끔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왜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이 안 되면 왜 성장이 안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진보교육이라는 곳은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기를 거부합니다. 기초학력을 평가해야 우리 80만, 800만 학생 중에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수조사하던 내용을 전진 정부,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단했습니다. 그 명분이 뭐였을까요, 총리님? 전수조사하던 기초학력 평가를 왜 멈췄을까요?

뭐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서열화, 뭐 여러 가지 과,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3%만 표본으로 조사를 하십니다. 나머지 97%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내 학력이 기초에 미달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기본사회 하신다면서요. 학력 기본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 돈 좀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님. 여러분들, 국무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반에서 1·2등, 전국에서 1·2등 하셨겠지만 기초학력이 안 된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의 기회들이 있겠습니까. 숫자 계산도 안 되고 문장 한두 줄도 쓰지 못하는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 소득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기초학력 미달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니까, 우리 아이들은 유학 가니까 기초학력은 딴 나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라면서요. 10명 중에 15명이 산수도 못하는데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은 그렇게 기초학력 평가를 하도록 교육부에서 모든 제도적 지원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우리 교육청별로 평가하는 것 한번 봐 주시지요.

중1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교육청별로 하라고 했는데요. 100%도 있는가 하면 서울·경남·세종·충남, 하나같이 진보적, 전교조 친화적 교육청에서는 일부밖에 안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학생 인권 강조하시지요? 모르는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하면 세상 정말 힘들게 산다’라고 억지로라도 가르쳐 줘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너 편한 대로 하세요. 배우기 싫으면 배우지 마세요.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평가 한 번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 주고 졸업시키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에 맞습니까?

총리님, 지금 고등학교는 3년 동안 모든 과목에서 빵점 받아도 고등학교 졸업 해 줍니다. 아시지요? 차라리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면 어느 정도 학력이 돼야 고등학교 자격을 받는데 일반고등학교 가면 3년 내내, 옛날 말로 처자도 고등학교 자격증을 줍니다.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던 이 기초학력평가 익명화시켜서 개인정보 다 삭제해서 밝히자 했더니 서울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대법원에 소송 제기했습니다, 밝힐 수 없다.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법원이 적법한 거다, 밝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이 수용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래 버렸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표시하는 겁니까? 기초학력이 얼마나 미달하였는지 알아야 앓혀 놓고 가르칠 것 아닙니까? 맞춤형을 하든지, AI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산수를 왜 못 하는지, 난독증이 있는지, 뭘 알아야 한 명씩 한 명씩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전남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1년 만에 한 열 배가 뛰었더니 해명을 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거다.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늘어날 뿐이다’, 어떻게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글 못 읽는 애가 있을 거라고요? 10명에 1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수 못하는 아이가 있을 거라고요? 100명에 15명입니다. 총리님, 이것 문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문제의 심각성을 적절하게 제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전체적인 평가 방법과 직접 연동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초학력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셨지만 병원에서 환자가 아프다고 왔을

때 진단 한 번도 안 하고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고 피검사 한 번도 안 하고 너 암이야, 너 빈혈이야, 너 뭐야라고 하는 의사 믿으시겠습니까?

왜 진보교육 하는 분들은 평가를 이렇게 거부할까요? 이것을 경쟁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단순함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부모로서 학교에서 평가 안 해 주면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다 학원 갑니다. 올해 초에 서울대학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갔는지 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라고요. 그랬더니 학부모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다 학원 갔습니다. 다 학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 신청을 하면, 몇십만 원짜리 강의를 끊으면 서울대학 무슨 고등학교, 우리 지역에서 몇 명씩 갔는지 다 알려 줍니다.

자, 의도는 좋지만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 하나둘밖에 없는 아이들 잘 가르치겠다고 올인하는 부모들을 이런 식으로 막아서 도대체 무슨 공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학교의 서열화를 걱정한다, 인정합니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경제·교육 격차가 일어나는 것 걱정한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답을 찾아야 될 것이지 마치 있는 문제를 없는 것인 양, 이런 통계 내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인 양,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기초학력 미달 그 3% 포집한 것만으로도 대도시에서 그리고 읍면에서의 교육격차가 거의 3배, 4배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를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얼굴 맞대고 부딪쳐야 될 문제를 안 된다, 학력 격차 또는 학교 서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희 교육위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새로운 교육부장관후보의 청문회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대통령과 총리님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제가 짐작컨대 초등학교……

아까 그 자료를 보시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초 미달된 학생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2학년 때도 기초 미달 학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 샘플로만 하니까요. 그러면 이 학생은 도대체 12년을 왜 다닌 겁니까, 학교를? 막말로 베이스 깔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급식 받아 먹으러 가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건 보수건, 우든 좌든 이런 학생들 얹혀 놓고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과연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것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몇 해 전에 가깝게 지내는 한 의원님으로부터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실상에 대

해서 더 좀 깊이 천착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이념적 접근을 떠나서 기초학력 문제 그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한두 가지 사례만 좀 말씀드리고……

저도 힘을 보탬 게 있으면 보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4년 동안 교육위에서 간사를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이렇게 1%씩 야금야금 매년 올라가는 현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실패입니다. 명백한 실패지요. 노벨상 받는 사람 1명 나오는 데 투자하는 돈의 절반만 들여도, 절반의 절반만 들여도 이렇게 문해력도 없어서 세상 나가서 살기 어려운 친구들의 숫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제가 다른 나라 정책들을 봤는데요, 미국의 보고서를 하나 한번 보시면……

국민성적표라고 해서 아이들 문해력과 수학 성적을 정말 꼼꼼히 해서 1969년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개인정보 다 가립니다. 홍길동이 몇 점 받았는지 김갑순이 몇 점 받았는지 이런 것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시다시피 총리님, 17개 교육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감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누가 더 잘 대응하고 있는지는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숨기겠다는 것은 선출직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경기도가 잘하는지 서울이 잘하는지 전남이 잘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문제 더 이상 심각하기 전에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 좀 이를 악물고 풀어 주시기를 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하여 오후 회의는 이재관 위원님, 곽상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충남 천안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안타깝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요,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재관 위원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장관님, 구윤철 부총리님께는 마지막에 견해를 좀 여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재정분권 계획이 이후에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그 이후의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국가균형발전 성적표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후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진도가 좀 나가다가 멈춘 듯한 느낌을 가진 시기가 상당히 있었고 지금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24년 수도권 인구, 50.8%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GRDP 수도권 비중이 2010년에 47.8%에서 2023년 52.3%,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늠하는 지표들 보통 재정자립도를 많이 씁니다. 평균 48.6%, 2004년도보다 오히려 8.6%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가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아주 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한번 총평을 해 보자면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방분권에 목을 매서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을 그렇게 전력을 기울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그동안 중앙부처 중심의 균형발전 방식 그리고 지방재정과 권한의 확대에 올인하는 기존의 지방자치의 정책 방향은 분명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균형발전 정책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추진 방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요,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결국은 주체를 세우는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이 결국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하신 진행 방식의 문제와 바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까, 아마 그 말씀에 대해서 제안 주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의 그 첫 번째 전략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점은 저는 포괄보조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그동안 획일

적인 지침에 의해서 추진했던 방식을 지방정부, 즉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그런 면에서 바로 중앙부처 중심에서 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자율계정으로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의 3조 8000억 원 규모에서 10조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는 내용 그리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기존의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겠다는 것 그리고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를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말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방안으로 아마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듯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과 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간, 사업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총리님, 아마 정부에서 제 그릇 챙기기 또 칸막이 등등의 어떤 소통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재관 위원 중앙의 칸막이는 중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까지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고보조금 사업의 통합적 추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112조, 사업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행정구조는 중앙부처가 방향을 정하면 지역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획하는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 소관 부처의 정책 기능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또 나름의 현실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 자율성의 약화,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의 문제 또 공모 사업에 응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 나름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 논리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새롭게 기획을 하면서 기존 사업은 존재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에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그 통합적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국가 예산, 즉 국가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상할 때 지방의 특성을, 지방의 현실을,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다소 실무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집중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칸막이 말씀도 주셨고 두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이러한 문제, 한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유용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유용한 사업은 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완성형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메꾸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대로 자치단체 사업은 자치단체 사업대로 제각각 추진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 시민,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각을, 다리를 놓을 때 이게 국비로 놓은 다리인지 지방비로 놓은 다리인지 주민들한테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그것을 엄청나게 따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틀, 칸막이를 저는 깎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 방식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체 계획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보완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이 이원적인 구조를 동질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 현재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순히 하게 어떤 창작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느낀 부분도 있고 현재 영국의 지역성장 협상, 지역분권 협상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중앙부처, 이 자리에 계시는 각 부처의 참여와 협조 그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기재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지역에 가서 한 1년 있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보조는 사실 제가 국고보조금 다 넘기라고 그랬습니다. 100% 다 넘기자. 한테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의 준비라든지 또 중앙의 역할(role) 이게 안 되고 한 10조 이렇게 해서 좀 늘렸는데요.

지역도 가 보니까 책임성이 좀 약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를 따지지 않고……

○**이재관 위원**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냥 국고보조사업은 무조건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포괄보조로 해서 책임성을 좀 높여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지역이 너무 나뉘져 있어요. 우리가 223개, 226개 이렇게 너무 나뉘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역별로 또 균형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돈을 뭉텅이로 한 일조를 그냥 혹 중앙정부도 줄 수도 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많이 줘도 거기서

또 나눠 먹게 되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이재관 위원** 그렇지만 계획의 주체가 자치단체가 되고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안부차관님이십니다마는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 또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같은 경우도 포괄성 및 상향식 그런 원칙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주도하고 또 국가가 지원하도록 국고보조사업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서로 같은 뜻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뜻을 모아서 저는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하신 여러 국무위원님들, 총리님께서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안부차관님, 소비쿠폰 판매 실적, 효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소비쿠폰 실적은 한 98% 정도, 이상 지급이 되었고요. 사용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간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카드라든지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되면, 그것도 한 75%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자한국은행에서 나온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도 118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성과가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같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의 계속된 부진 흐름이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 소비가 상당 부분 개선이 돼서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게 어제 부총리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집행까지 완료가 된다면 소비가 촉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더 기대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과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중요성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3년간 가혹한 환경에 물리면서 줄폐업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 지난 20년 93만 명, 22년 80만 명, 줄어들다가 23년 91만 명, 폐업률이 전년 대비 10.5% 상승했습니다. 폐업공제금 21년 9000억, 22년 9600억, 23년에는 무려 1조 2000억, 폭증했습니다. 이제 100만 폐업 시대입니다.

여기서 저는 폐업이 증가하는 만큼 창업도 늘어 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소매업 폐업이 약 19만 개로 가장 많고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입니다. 그런데 창업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창업과 폐업의 증가 추이라든지 업종별 창업과 폐업이 비슷한 양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총리님, 이렇게 추세에 맞게 창업도 증가하고 또 폐업도 하는 이 구조가 창업 생태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순환의 구조로 봐야 되는 것인지? 물론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지만.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창업 생태계라고 보기에, 그렇게 표현해서 집어넣기에는 우리의 폐업 현황이 좀 극심한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창업과 폐업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이재관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사이클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분명히 두 가지 요소가 다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진단은 악순환 구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 중에서 폐업한 소상공인, 그 숫자가 22년 기준으로 74만 개입니다. 5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지요.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간 3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부터 지금까지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6000건이 넘는 재창업자금이 지원됐습니다.

회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회수 현황이 또 가슴 아프게 합니다. 21년 800억대, 22년 2000억대, 23년 8000억대, 24년 1조가 넘습니다. 지난해는 21년 대비 1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미회수 금액……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내지 못하는 그 상황인 것이지요. 코로나19 그리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이 한 1억 원 그리고 폐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회수 금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근본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23% 정도 됩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일본이 9.5%, 독일이 8.5%, 미국 6.1%,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큰 거지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정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비 시장에 비해서 공급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지요.

실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식업을 창업했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폐업했습니다. 그 후 다른 요식업으로 재창업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식업 또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의 하나는 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경쟁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다른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10명 중 7명이 창업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창업 희망 분야를 보면 소상공인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롭게 도전한 수많은 창업자, 빛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저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기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관제를 두어서, 그리고 정책 능력도 해야 되고 또 그 정책 능력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을 할 때 정확한 상권 분석 정보라든지 그리고 자금 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업종 정보 교육 등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이러한 악의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존경하는 곽상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언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와 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과거 모든 시대에 걸쳐 갈고닦아 기른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지난 시기는 모진 추위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때였으나 이제 지금은 따뜻한 바람 속에서 기운이 샘솟는 때입니다. 그러니 천지의 변화에 따르고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아무런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자유를 지키고 보전해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졌던 독창력을 발휘해서 봄기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정수를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읽은 이 글은 우리 선조들이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태화관에서 선포한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원문을 지금의 우리말로 바꾼 글입니다.

독립선언서의 이 구절은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발표된 글이지만 독립선언서의 이 구절은 우리 국민이 지금도 품고 있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와 의가 펼쳐지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모진 추위 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때에서 벗어나 온 세상에 새봄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따뜻한 바람 속에서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처음부터 가졌던 자유를 지키고 보전해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원래부터 가졌던 독창력을 발휘해서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정치와 행정은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의 이 구절 속에 충분히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와 행정이 우리 국민의 모든 소망을 지금 당장 모두 이룰 수 없더라도 모

진 추위 속에서 강요된 힘으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세상에서 벗어나 따뜻한 바람 속에서 자유의 기운으로 새 생명이 샘솟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치와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이런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걷기 위해서 우리 정치는 그리고 우리 행정은 보다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원칙을 살피며 현실의 세상을 되짚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행정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은 모두 법치행정의 원칙에 충실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그 근거인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 봤습니까? 만일 안 했다면 앞으로 하면 됩니다.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 및 결산도 국가의 행정작용이므로 당연히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하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막연히 추구하거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저 추상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그 집행 성과가 수치상 적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온전히 반영하고 제대로 실현할 때만 정부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이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된 예산에 상응하는 집행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 예산의 집행으로 해당 법률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집행과 결산이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은 언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론상 마땅히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처음 제정할 때 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도 함께 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편성·집행 시점에 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이후에 예산의 집행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결산 시점에는 반드시 그 판단 기준과 판단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사후적 평가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설정한 시점이 매우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예 평가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요.

또 정부는 마땅히 예산의 집행을 통해 그 법률이 제정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법률의 집행 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를

모아 뒤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정립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추후 예산의 집행이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행정은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만을 보고 그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산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이 지금까지 결산의 과정에서 유지되어 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예산이 과대계상되었는지 과소계상되었는지, 예산편성에 대한 예측은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허위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법률 목적이 실현되었는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저 숫자만 맞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 아마도 이른바 형식적 예산결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이 단지 형식적 결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이 형식적 결산에 더해서 그 예산이 법률의 목적을 얼마나 제대로 실현했는지, 그래서 우리 국민의 국민복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바지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체적 결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행정을 보면서 ‘아, 앞으로 우리 세상에 따뜻한 봄날이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예산 편성·집행 그리고 결산의 성과 그리고 정당성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 혹시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거의 취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상언 위원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서 아마 법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정부가 어떻게 이러저러한 예산 사용에 있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판단하느냐라는 것을 질문 주신 것이라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새 정부는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집단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거치는 것을 최대한 하자, 그것을 첫 단계부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자라는 새로운 기준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죽 누적되어 와서 축적되어 있던 역사적인 성과물 위에서 새롭게 그러한 기준이 반영되고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위원 모든 법률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요. 그 예산의 집행에는 당연히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예산집행의 당사자가 되는, 대상자가 되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그 성과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성과지표들을 조금 더

객관화하고 표준화해서 모든 법률에 반영할 수 있고 추후 법률의 개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려면 두 단계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새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에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전의 정부는 이런 어떤 법률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리고 법률에 기반한 예산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예산 항목이 설계되었는지, 설계된 이후에는 결산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 종합적인 과정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혹시 또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프로세스를 어떻게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지금 주신 말씀은 현재까지 법에 정해져 있고 국회가 정부와 함께 진행해 온 과정을 통해서, 예산결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이런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과연 정책이 잘 설정되었는가부터 집행되었는가까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잘 개발되고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마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을 말씀 주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이 예산 수립 과정에 최대한도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립한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평가지표까지 만들어 내는 것까지 연결시켜서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상언 위원** 그러면 제가 산자부차관님, 문신학 차관님 지금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박상언 위원** 차관님께 질의함으로써 조금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조금 전에 ‘정부의 모든 예산은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해당 법률의 목적을 온전히 반영하고 제대로 실현할 때에만 그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견해에 혹시 동의하시는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당연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상언 위원** 혹시 어디 계신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여기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언 위원** 이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법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근거해서 집행되고 있는 건데요. 저소득층을 포함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냉난방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혹시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박상언 위원** 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목적을 보면,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된 목적, 제

정된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 목적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너지 빈곤 완화와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은 뭐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

○곽상언 위원 일단 잘 모르시지요?

제가 그 결산자료를 보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난방비 부담률 감소,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이 난방비 부담률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가 하나의 지표입니다.

또 하나, 단전. 단전은 언제 되느냐 하면 전기요금을 못 내면 전기를 끊어 버립니다. 잔인하지요.

단가스. 단가스가 뭐냐면 가스요금을 못 내면 가스를 끊어 버립니다. 이것을 얼마나 예방했는지 그걸 또 지표로 봅니다.

그다음에 한랭 관련 질환 감소, 이걸 뭐냐면 날이 더운데 에어컨을 못 켜요. 그래서 병이 납니다. 그런 질환이 얼마나 감소됐는지. 한겨울에 추워요. 그런데 난로를 못 켜요. 그래서 동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결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좀 구체화한 지표를 추상적으로 생각해 두기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검증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전혀 우리는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좀 구체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결산은 제대로 되었느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식적 결산이라는 것이 이 사업 목적,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겠지요.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년도분 반영 예산을 조기 정산했다, 전년도분 예산을 반납했다, 그래서 불용 예산이 생겼고 이월 예산이 생겼다. 왜 생겼느냐? 이유는 수급자 발굴을 못 해서 그렇다, 정보 공유를 못 해서 그렇다, 가구 특성 반영을 못 해서 그렇다, 단가를 제때 인상하지 못했고 기간 연장 등으로만 대응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애초에 항목을 조정해야 되고 이 목적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정부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두고 ‘아,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게 지내겠구나. 헐벗은 가정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제도만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예산만 받아 놓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굶어 죽는 사람은 그대로 굶어 죽고 더운 사람은 계속 더운 겁니다. 왜요?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결산 자료에 나온 이런 성과지표라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반영해 주시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새로운 봄날 같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중기부장관님이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존경하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사하 갑 국회의원 이성권입니다.

먼저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지역구는 서울이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성권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때 5극 3특이라는 형태의 지역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성권 위원 첫 번째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수도권 혹은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구나 교육, 고용, 산업 인프라 등이 거의 수도권에 다 몰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사실은 백악기 무효인 것처럼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셔서 또 국정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정부들

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그야말로 저출생 문제와 같은 가장 난제로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는, 그러면서 점점 결과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솔직히 듭니다. 비교적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균형발전을……

○이성권 위원 총리님,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아마 여러 가지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급속성장, 경제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 수도권 발전전략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나라를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개발독재를 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했지요.

우리가 봉건제 시대에 가족이 많으면, 자식들이 많으면 장남한테 교육에 대한 기회라든지 또 자본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장남이 잘되면 밑의 자식들한테 분배하는 모양새로 전략을 채택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략이 그러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해서 우리 경제 규모나 세계적인 위상이 커졌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원의 배분 문제를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의 자원을 배분했다면 이제는 지방으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부분적이고 단기적이지만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가, 저는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표를 보면 혁신도시를 통해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했지요. 표를 보면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완료된 17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반한 이주율도 70% 정도 늘었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2016년에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의 개수가 249개였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4813개로 업체가 한 30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자원을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나타난 효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확연하게 눈에 드러납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 이전에 비하면 이렇게 급속도로 그 지역에, 외부로 청년인재들이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공약사항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지요?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성권 위원 이전을 약속했는데 그 정도로 부산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겠

지요. 수도권 외에 또 지방에,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부산이 지금 현재 소멸 위험에 빠져 있다라든지 30년 뒤에는 인구가 25% 정도 소멸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당을 떠나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청사 이전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도록 하지요.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 해수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5% 이하 아십니까?

○이성권 위원 5% 이하가 아니고 전체 1년 예산이 6.7조 원인데 1%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해수부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1%밖에 안 되지요.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 직원들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1000명……

○이성권 위원 1000명이 안 됩니다, 860명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다시피,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직원 숫자를 한번 보시지요.

강서구 1800명입니다. 부산의 서구와 중구가 1100명이에요. 서울만 놓고 봐서 기초자치단체의 직원 수가 1492명입니다. 부산은 856명입니다. 해수부가 아까 860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산 규모와 그리고 직원 숫자만을 놓고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라는 관청만 이전했을 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하나 만드는 것 정도의 효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왔을 때 이전의 효과라는 게, 관청이 이전하는데 주변의 일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말고 어떤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느냐 이게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특별법이 마련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산하기관이 함께 이전해야 되고, 해수부 산하기관. 또 한편으로는 해양 관련된 관련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 이미 해사법원을 포함한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의 이전까지를 같이 상정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질문 하나씩……

예, 맞습니다. 방향성은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에 기초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법안이 몇 개 발의돼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성권 위원** 법안이 지금 2개가 발의돼 있는데 하나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하나는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가 하나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전에 대한,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은 지원 플러스 해양산업 육성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 2개 법안은 동일한 내용을,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임위에서 병행심사를 하는 게 맞겠지요?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만 질문 주신 것 가지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설명을……

○**이성권 위원** 어쨌든 이게 해수부 이전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양 정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시지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 걸 바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의하면 여당이 발의한 법안만 단독으로 심사를 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병합심사를 안 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저 상임위 사정을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성권 위원** 혹시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해수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이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우리 국회 운영상 보면 유사한 법은 병합심사를 하게 돼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일단은 위원님, 이 2개 법안의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연말까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부산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만들려면 부산시가 상위법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상위법을 연말 이전을 위해서 급하게, 시급하게 상위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요구에 의해서 이 법이 대표발의가 된 것이고 광규택 의원님 법안은 이러한 법의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해수부가 내려갔을 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골조는 어쨌든 해수부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법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기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런데 입법취지가 좀 다릅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어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저는 오늘도 농해수위 위원님들 만나서 이 법은 해수부와 부

산시가 직원들의 정주여건 등등 해서 지원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응당 농해수위로 와야 된다 이렇게 협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안 다 논의를 하려면 농해수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런데 이것을 병합심사를 하게 되면……

○이성권 위원 병합심사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장관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발의된 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저는 농해수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님 들으셨는지요? 주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은 상임위의 판단이 있는 것이어서 다른…… 두 법 중의 또 하나는 현재 어디서……

○이성권 위원 아니요, 이게 아직도 위원회에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농해수위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무장관인 해수부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견해를 밝히셨는데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국무총리 김민석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의 의견을 포함하고 반영해서 양당에서 의논하고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무장관의 의견은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도 주무장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총리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수부 관청 이전으로만은 부산을 절대 해양수도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더, PPT를 좀 돌려 보시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직접 7월 달에 부산에 오셔서 타운홀미팅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수부 산하기관 그리고 관련 기업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고 계신 주무장관 맞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약속을 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 같은 걸 마련했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제가 장관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아직 1급 인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1급 인사가 곧 끝이 날 텐데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 거고 내부적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늦지 않은 시간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이성권 위원 적어도 전체적인 이전이 마무리되는 로드맵을 떠나서 이전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거는 언제쯤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야지 그다음 단계

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국민들께 발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조만간이라고 하면 언제 정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시기를 제가 특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이것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하나 더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장관님이 인사청문회 때나 언론 인터뷰할 때 또 대통령도 약속을 했지만 대표적인 해운기업인 HMM—구 현대상선—도 부산으로 이전 유치하는 걸 약속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이 아래에 보면, 저 자료 아래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만 갑자기 민간기업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아니요, 이것은 일관되게, 대통령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아무리 정부 지분이 77%에 이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된다, 특히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정부 지분이 7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고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가 바뀐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직접 HMM 관계자들을 아직은 접촉하지는 않으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와 과정이 있고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이 나고 조만간에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노든 사든 적극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성권 위원**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해수부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결정을 아직 안 냈다고 했지요?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해양수산부를 12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조금 전의 위원님 말씀처럼 해수부 하나만 내려가지고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해양수도권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행정을 총괄하는 해수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여기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HMM……

○**이성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동남투자공사까지 저희들이 집적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권 위원** 하나씩 구체적으로 제가 체크……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런 부

분은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하나씩 체크를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PPT 보면, 아직은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 짓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그 지역 언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인천에 있는 해수부 산하기관이 있고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께서 그 기관은 이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더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약속 한 적 있습니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검토…… 인천에 가 있는 극지연구소는 인천으로 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성권 위원**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사와 관련해서,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전하지 않는 걸 약속을 한 건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극지연구소에 대해서는 이전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성권 위원** 이전을 검토하지 않느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이성권 위원** 제외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할 건데, 어쨌든 방금 아까 장관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수부 자체의 이전만으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같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전할 기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지금 해수부가 검토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대상이 되는 데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전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17개가 있고요. 그중에 부산으로 이전한 곳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기존에 이전해 있는 데,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이 표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저도 부산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해양이나 해운 그리고 조선 이런 쪽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수부가 부산에 왔을 때 반드시 기본적으로 와야 될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기관 정도가 나와요.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내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5개 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본질의를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늦은 시간인데 이틀 동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끝에서 아마 한 다섯 번째 정도여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올해 결산은 윤석열 정부 3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이고 따라서 꼼꼼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하고 부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어서, 그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역대급 세수 펑크 원인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경기침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금 드린다면 다시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가장 큰 게, 경기침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걷힌 국세 수입이 책정된 예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세수 추계 상황인데요. 보면 오차율이 9%를 넘었던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였냐면 세수가 초과해서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세수결손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걷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경기가 좋아졌거나 내지는 대외 경제 여건이 바뀌면서 세수가 초과 발생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9% 넘는 세수 오차율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2023년, 24년처럼 세수결손으로 인한…… 무려 56.4조, 30.8조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일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기재부에서 뭘 일이 있었던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세수결손이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한번 부총리님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수 핑크의 첫 번째 원인은 의도적인 세입 과다 경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년 7월 21일 날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는 13.1조 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도별로 23년도에는 6.4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24년에는 7.3조 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원이 감소한다는 뜻이겠지요.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23년도에 3.5조 원이 줄고 법인세는 6.8조 원이 줄고 증권거래세는 7000억이 줄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3조 원이 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2년 결산과 23년 세입경정 사이에 세제개편안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경제성장률이 있지’, 그래서 당시에 23년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봤는지를 살펴보니깐 정부는 1.5%로 잡았어요. KDI는 1.4%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량 감소로 수출이 부진할 것이다, 내수 부문에서는 고금리와 투자 둔화로 인해 전체 성장 폭이 제한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의 성장률을 잡았을 때 소득세의 경우 2.9조 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이러나저러나 감소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3년도 세입예산 추계를 하면 성장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제개편안 반영했을 때 약 6000억 정도의 소득세는 내려가야 되고요. 법인세의 경우는 어떤 변수를 넣는다 하더라도 감액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2조 원가량의 증액이 편성되었고요, 실적은 22년 대비 23조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찾아 보니까요, 상장사 영업이익이 45%나 줄어서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 버렸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만 더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0.8조의 세수 핑크가 발생한 24년도 세입예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때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 성장률 1.4% 전망을 했고요,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세는 131.8조 그다음에 법인세는 105조 가량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세수추계가 23년 결산 대비 절대로 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무리 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막 해 놔 놓고 세입예산을 경정할 때는 이거야말로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국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로 인한 세수 축소 이것을 의도적으로 좀 모면하기 위해서 세입에 대한 과다 경정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기재부는 이런 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기재부가 세수 전망을 할 때 과거 트렌드를 본다는지 또 세수 전망할 때 저희들이 그 지표를 진짜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

측면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기재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게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 거지요. 이게 왜냐 그러면 법인세하고 종소세가 훨씬.....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기재부가 나중에 회계 4분기 정도 되면 세입경정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이제는.....

○임미애 위원 스스로 무능함을 지난 3년 동안 여실히 증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 기재부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달게 받겠고요. 다만 이게 경기가 나빠질 때는 더 나빠지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좋고 한 약간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다가 생각보다 상장사들의 수익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거기에다가 또 유류세 그다음에 개소세 이런 감면을 계속 지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조세 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최재해 감사원장님!

○감사원장 최재해 예.

○임미애 위원 해마다 결산검사보고서 내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22년도부터 감사원에서 제출한 결산검사보고서를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근 10년간 큰 규모의 세수결손과 추가 세수가 반복되었고—최근 10년간은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 드렸던 그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21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1.3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세수 오차율이 21.7%, 초과세수를 기록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재부의 세수추계 및 실제 수납된 국고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서 무려 19페이지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초과세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1건, 주의 7건, 권고 2건, 통보 25건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만 무려 35건의 처분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원장님 굉장히 꼼꼼하게 일하셨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건 22년도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셨던 분이..... 원장님 21년도에 부임하셨더라고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무려 2년 동안 97조 원의 세수 핑크를 초래한, 여기서 97조라고 말하는 건 23년도·24년도·25년도의 10조를 포함해서 97.2조입니다. 97조의 세수핑크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감사보고서가 나왔을까를 보니까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23년도, 24회계연도의 결산검사보고서에는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단 8페이지에 걸쳐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작년 국회에서 감사원이 역대급 세수결

손을 초래한 기재부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왜 없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서 국회의결을 하니까 그때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저희가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이렇게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원은 이때 결과를 어떻게 냈냐 하면요 지난 22년도의 문제인 정부의 초과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매 쉽게 비판했던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형식적인 검토만 했고 주의통보만 하셨더라고요. 시정요구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경기변동요인, 기타요인 이것으로만 원인을 분석한 걸로 봐서, 감세라는 단어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 보면서 ‘감사원장님 22년도에 보고서 제출할 때의 그 결기는 어디 가고 23년도, 24년도에 뭐 하셨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세라는 단어를 꺼내기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좀 쫓리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22년도는 감사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올해 24회계연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 분석한 자료만 그냥 실은 겁니다. 그리고……

○**임미애 위원** 23년도에도……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러니까 23년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3년도 시정요구에 따라서 24년도에 실은 건데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하고 짧은 결산……

○**임미애 위원** 검사하신 거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검사할 때 원인분석 정도만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올 하반기에 전면적인 감사를 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 하는 건 23년도, 24년도 함께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다 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도대체 세수 핑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정확히 한 감사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감사를 착수하면 내년쯤이면 아마 보고서를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제가 세수 핑크 원인에 대해서 아까 과다한 세입경정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원인은 뭐였냐 하면 기업소득이 줄어든 데 비해서 법인세 감소가 굉장히 커요. 기업소득이 감소한 건 3% 정도였는데 법인세 감소는 22%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법인세 세수는 22년 103조에서 23년 80조로 22% 감소했습니다. 법인소득 감소보다 7배 정도가 더 많이 세수가 줄어든 건데요.

법인세 과세표준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세 산출하기 위한 기준금액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실제 납부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게 다 들어갔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액이 22년과 23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22년도에는 21.7%였는데 23년도에는 17.4%로 뚝 떨어집니다. 법인세가 23년도에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구간 조정하고 1%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수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세수를 전망할 때 저희들은 세제 개편에 따른 부분은 반영을 하는데 트렌드를 보았을 때, 2021년·2022년 트렌드를 보고 2023년도를 전망했는데 그때는 +110조가 2년간 더 들어오다 보니까 트렌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다른 패스(path)로 해 가지고 꼭 꺾져 버리니까 세수가 굉장히 감액, 줄어드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일반 대중들이 조금만 관심 있다면 부총리님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국민들이 납득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저는 이 원인이 과도한 조세지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봅니다. 소득공제, 비과세 이런 조세지출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조세지출액이 재정지출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4%인데요, 조세지출 증가율은 8.2%로 2배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국세 감면 법정한도는 3년 연속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세지출이, 21년부터 25년까지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1년 10.5조 원에서 매년 증가해서 25년에는 16.6조 원까지 증가합니다.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9%에서 25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지요.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1년 2.2조 원에서 23년 4.3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4년도에 반도체 등 영업실적 악화로 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다시 25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출, 지금 나라 살림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로 대기업에 해 주는 게 전략산업,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기업들은 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또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사실은 조세지출 내역을 죽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주로……

○임미애 위원 이것은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은 부분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것 조정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매년 검토해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한 1조 정도를, 매년 1조 정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서민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 줄이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법인 종소세가 거의 한 19조 정도가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양도세가 또 부동산 쪽의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이쪽이 또 한 6조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유류세 인하 이런 게 한 7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 30조가 이렇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로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정부는 기업한테 진짜 통 큰 세제혜택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제가 느낄 때는,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세금을 걷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수 펑크 메우려고 세원 사각지대 찾는다고, 2011년도부터 시행됐던 어선 감척 사업이 있습니다. 어선 감척 사업의 보상금을 갑자기—작년부터지요—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인데.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어민들의 항의에 부딪히니까, 원래 세금이라는 게 자진신고·자진납부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도 안 하고 자진납부도 안 했으니까 가산세를 원래 붙여야 되나 너희가 세금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미리미리 알려 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으니 가산세는 면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받아 왔던 어선 감척 사업의 보상금을 이제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필요해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하나뿐인 생계수단을 국민으로부터 뺏으려고 할 때 그 하나뿐인 생계수단에 대해서 기타소득이니 사업소득이니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제 세금을 거둘 때는 기타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이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세금은 과세를 하는 거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목적에 의해서……

○임미애 위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책에 의해서는 조세 감면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임미애 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했던 이것은요 조세 감면하지 않았고요, 물론 법을 만들 때 조세 감면이라는 내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제 와서 2011년도부터 어선 감척 시행되었던 것을 세금 내라고 얘기한다면 어민들 입장에서 매우 황

당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마지막 남은 생계수단을 뺏아 가면서, 국가가 필요하니 ‘안 돼’라고 해서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면서 그것까지 알뜰살뜰하게 찾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가혹한 게 맞나라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 민원이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자료 주시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어떤 사유로 그렇게 발생됐는지 챙겨 보겠고요.

제가 조금 답변드릴 게, 지금 세수추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진짜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중에 또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 번 더 추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앞으로……

저희들 보통 불용률을 보니까 한 6~7조 같으면, 예산에서 자동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행정부가 알아서 크게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안 건드려도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고요. 만약에 30조라든지 50조 이렇게 가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국회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고 전망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새로운 기재부, 신뢰받는 기재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울산 울주,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중대재해 사망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근 여러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근절을 위한 칼을 빼 든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칼날이 엉뚱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누구에게는 서슬 퍼렇고 누구에게는 한없이 무딘 칼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노동부장관입니다.

○**서범수 위원** 지난 8월 6일 이 대통령께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관련해서 중대재해사고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 방안을 찾으라 하신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전략회의도 열고 경찰과 함께 포스코이앤씨 본사 3개 업체 다섯 곳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20일에는 의정부 공사장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서 DL건설을 또 압수수색을 했고.

자, 그러면 그 해당 업체들의 건설공사가 지금 다 중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금 작업중지권이 발동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해당 업체에서 알아서 작업중지를 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작업중지를 내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DL건설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DL도 아마 자체적으로 작업중지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풀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건 푸는 과정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현장 노동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포스코 가셔도 그것부터 먼저 여쭙봤습니다, 결국 작업중지하게 되면 휴업수당들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포스코의 답변은 챙기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챙기겠다고 이야기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아마 일용직은……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런 걸로 인해서 맨 밑단에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중지를 할 겁니까? 고용노동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아마 포스코 지난번에…… 이번에 또 중지 내린 것은 제 기억으로는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나서 8월 6일까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하고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작업 재개하기로 하셨는데 8월 4일 날 이틀 일찍 풀었는데 그날 공교롭게 또 사고가 나다 보니까 다시 또 내린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원인은 원인대로 빨리 진상규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피해가 없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경영책임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이앤씨라든지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를 지금 경영책임자로 간주를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경영책임자라고 하면 아마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지는 하청에서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청이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원청의 대표이사……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포스코이앤씨 최고 CEO까지를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서범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난 철도공사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두 분이 산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번 철도공사 사건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장관께서 국토부에게 철도공사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건설업의 경우 그러한데 철도공사도 건설업에 속하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살펴보시겠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최종 책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종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공기관의 장, 코레일 사장이 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건 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하청업체 노동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의 원청은 코레일이고……

○**서범수 위원** 또 코레일의 원청은 국토교통부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는 감독……

○**서범수 위원** 그런 논리가 형성 안 됩니까? 왜냐? 공기업 100%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코레일은 주식도 없고 100% 현물출자한 회사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원청에서 하청과의 관계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과의 관계도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사료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민간기업에서 발생한 산재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재나 똑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공공기관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더 엄격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총리님, 민주당에서 최근, 지난 8월 24일이지요, 노란봉투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 법 2조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이나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기재부장관을 임명한

분도 대통령,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원 및 조직 통폐합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을 임명하는 분도 대통령,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서범수 위원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31개 공공기관을 대폭 통폐합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위원님께서서는……

○서범수 위원 무리가 있는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우리 공공기관의 산재도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 3년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사망사고는 크게 줄어들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범수 위원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추세는 줄어드는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지금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건설업하고 제조업, 제조업에서도 조선소인데 비슷하게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공사 대금이 줄어들고 또 위험한 업무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막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서범수 위원 알기만 하셔서 될 게 아니고 거기의 원인을 알았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방과 함께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도 병행하면서 중대재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행안부장관님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아, 출장 가셨지요.

차관님, 우리 재난의 정의가 됩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여기의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재난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이 크게 없다.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크게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 피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송수관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 송수관이 터져서 단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3일 내지 5일간 단수가 되면서 소상공인들, 즉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이차적인 피해로 인한 거라고 해서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연재난으로 인한 거든지 사회재난으로 인한 거든지 재난은 재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할 게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현행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요 위원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입니다.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저것 처음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제가 재난은 직접 소관하지 않고……

○서범수 위원 처음 보실 건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그러면 행정규칙이 또 열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없어요. 행안부에서 안 만들었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확인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으니 너무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 많아서 안 만들었대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 만들 계획이 없답니다. 그러면 저걸 없애 버리든지요.

그래서 차관님,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여기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이 안 오셨는데 차관님이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경찰국이 폐지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윤호중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경찰국이 폐지됨으로써 경찰조직 경영의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경찰조직 운영의 정상화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경찰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찰국이 만들어짐으로써 일어난 폐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

○서범수 위원 차관님, 답변 못 하지요?

경찰청 차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찰국이 만들어짐으로써 일어난 폐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하면서 경찰청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경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거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차관님, 이제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안 하실 거지요? 경찰청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독립성은 보장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해 왔고 경찰국…….

○서범수 위원 그렇게 해 왔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경찰국의 가장 큰 논란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어져서 초기에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폐해가 금방 그렇게, 지금 차장님 말씀은 그런 폐해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폐해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건 아주 과거 얘기 아닌가요?

○서범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경찰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폐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 이야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저희가 경찰청이 과거에 행안부에서 독립을 하면서, 경찰청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경찰청이 독립을 한 거고요. 경찰국이 있음으로써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훼손됐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는 크게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지시나 감독은 안 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제 지역구가 울산 울주입니다. 반구천 암각화가 지난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알고는 계시고, 그때 오신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서범수 위원**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유산 몇 번째로 등재가 됐을까요? 열 일곱 번째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면, 등재가 된 게 목적이 아니고 좀 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산에서는 지금 홍보를 위해서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잘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예산이?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부총리님, 이게 지금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반구천의 암각화가 열일곱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걸 하려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도 통과, 절차적인 방안과……

○**서범수 위원** 절차적인 문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문제를 좀……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로만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박물관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안까지 해 가지고 주무부처하고, 유산청하고 협의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좀 긍정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기초실장입니다.

○**서범수 위원** 우리 KTX 울산역에 가면…… 가 보셨어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국가유산청장님, 가 보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서범수 위원** 울산역 해 놓고 괄호 치고 통도사 되어 있습니다.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기념으로 괄호 치고 부역명을 기록해 놔거든요.

그러면 반구천 암각화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지역인데?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역명은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관리지침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국토부에서 만든 관리지침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여섯 자 이상이 안 된대요. 또 역명 부기명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관리지침 바꾸면 안 됩니까, 국토부에서? 실무자들 이야기는 관리지침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통도사도 세계문화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도 세계문화유산. 하나는 등재하고 하나는 등재 안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살펴보겠다고요? 살펴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 관리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차관님, 아마 장관님 오늘 반구천 암각화 갔을 겁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거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연댐이 있는데 우리 반구천 암각화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되는 문제하고 울산의 물 공급의 문제가 상충된 문제가 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는 됐습니다만 장마철에 비가 오면 1년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저렇게 침수되어 물에 잠겨 버립니다. 잠겨 버립니다. 저 물이 빠지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 벌써 저 흔적이, 물의 그걸로 인해서 흔적이 없어지는 그림이, 2개인가 3개인가가 없어졌다 그림입니다. 저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조치를. 그래서 결국은 울산의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 때문에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 금한승** 예, 종합적인 거 보시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총리님, 지난번에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도 오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오고 해서 대구 하이웨이가 어떻고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끌어들어서 뭘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부처에만 맡겨 놓을 건 아니다. 다시 한번 그런 걸 가동을 좀 하셔야 될 게, 아마 국무조정실에 가면 많은 서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안 맞는가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부처 지금 돌아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 갑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면 위원**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한 정책홍보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제가 총액은 잘 기억을……

○**노종면 위원** 95억 8000만 원으로 저희에게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22년에는 6억 4000만 원이었고 그 전년도인 2023년에는 12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5배 폭증했지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상진료체계 관련해서 예비비로 홍보비를 90억 편성해서 집행해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표현에 제가 좀 동의가 안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소위 의료개혁이라고 불렀던, 저는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혼란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여론 반전시키는 데에 국가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95억 8000만 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비였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의대정원 확대, 급 올리려는 확대와 관련된 홍보비가 9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예비비 편성의 문제입니다.

이 91억 2000만 원 가운데 예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90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지난해 이 사안과 관련해서 3월로 기억합니다만 2024년 3월에 보건복지부가 예비비 90억 원을 승인받아서 끌어다 썼습니다.

이게 특정 정책 홍보에…… 정책이잖아요, 정책. 정책은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 홍보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장관님께서 이해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의대정원 증원 때문에 생긴 의정갈등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의료 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안내하는 홍보의 필요성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한 홍보나 이런 홍보의 내용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안내, 특히 추석 명절 같은 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 응급실이 부족해서 숨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알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비중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일반적인 정책 홍보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경우에 따라……

○**노종면 위원** 만약에 정책홍보비에 쓴다면 뭔가 긴급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모순입니다. 정책을 긴급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줄속 또는 즉흥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쉬워요. 그런 줄속 정책, 즉흥적인 정책 결정일 수 있는데 예비비까지 끌어다 썼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만한데 제가 보니까 작년 3월이면, 예비비를 끌어 온 시점이 작년 3월이면 총선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선 전, 그러니까 예비비를 받아서 쓰기 시작한 3월 초부터 총선이 있었던 4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54억 3000만 원을 썼어요. 전체의 62.6%를 사용했고 총선 이후에 연말까지 약 9개월간은 37.4%를 사용했습니다. 복지부 통계 과정에서 일부 수치가 누락돼서 총액 계산이 맞지는 않습지만 비율은 거의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것을 보면 의대정원이 총선용 아니었나, 총선용으로 급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고 거기에 국가예산 끌어다가,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막대한 홍보 작업을 벌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제가 금액은 파악을 했지만 시기나 아니면 홍보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됐는지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런 일은 재발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정권이 집권하고 있든 간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의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정책은 신중하게 준비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예비비가 들어갈 경우가 거의 없어야 정상이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노종면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인정돼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뭐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노종면 위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기재부 심사를 거쳐야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이 사안, 지난해에 기재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적절한 심사였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당시에는 워낙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또 병원에 의사들이 부족하고 거기다가 건보에서는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3조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좀 효율적으로 하라 해서 복지부에서 운영비, 홍보비도 이렇게 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예비비 사용을……

○노종면 위원 그 말씀이 맞으려면요,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됐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더 장기화된, 뒤로 갈수록 예산집행이 더 돼야 됐던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복지부에서 집행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종면 위원 심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은 규모로 이렇게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복지부가 그것을 한 달에 몰아 썼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른(even)하게 골고루 썼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체크가……

○**노종면 위원** 아까 보신 대로 골고루 쓰지 않았고요, 총선까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썼고 그 뒤에는 정말 추석 이럴 때 써야 될 데 일부 쓴 게 있어요. 그런데도 심사가 적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은 또 복지부장관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본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살펴서 예비비 심사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어떤 권력자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논란이 생기니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끌어다가 썼다,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전례라고 보고요.

문체부에서는 지금 김영수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노종면 위원** 문체부에서도 국정홍보 예산으로 엄청나게 쓰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정부광고 많이 집행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44억 원. 단일 정책에 44억을 썼습니다. 이런 일이 부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에는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매체에 집행이 됐는지 총선 전후로 구분해서 분류·집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리고 산자부 문신학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노종면 위원** 문 차관께서는 과거 이른바 원전 수사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구속까지 당하셨다가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받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4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법원 판결로 복직을 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잠깐 직을 떠나셨다가 차관으로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공직사회에서 어떤 부당함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꼭 명심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정비할 때 산자부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속한 부처는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는데 산자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한전KDN,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이른바 혁신안이라는 것을 산자부에 제출합니다. 정부에서 YTN 지분 팔라는 압박이 내려오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압박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때 한전KDN 측은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다,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요. 비슷한 시점에—저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한전KDN의 입장이 정부에 공식 제출된 직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2022년 8월경으로 추정되는데 ‘통일교가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이게 건진법사로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전성배라는 자가 당시 통일교의 2인자로 불렸던 윤영호 본부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을 확인하고—한전과 마사회는 당시 YTN의 1대·3대 주주였습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실제로 그 문자메시지에—지금엔 산자위원장이십니다—이철규 의원이 거론됩니다. 정말로 이철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이후 상황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한전KDN 사장에게 매각을 종용합니다. 그리고 한전KDN의 입장은 결국 바뀝니다, 보유하겠다는에서 팔겠다고. 저런 압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방위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월에, 저런 국감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인 2022년 11월에 최종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지분 인수전이 벌어지지요. 통일교도 나서고 한세실업이라는 데도 나서고 유진기업도 나서고 한국일보 등의 여러 언론사도 나서고. 치열한 인수전 끝에 아시다시피 유진그룹으로 낙찰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은 또 달리 바라보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됐던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그것도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던, 그래서 보도전문채널을 공적 지배구조하에 두었던 우리 사회의 어떤 체제를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저렇게 팔 비틀어서 팔게 만든 거예요. YTN을 공영에서, 공공에서 민간으로 사영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저게.

문 차관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보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노종면 위원** 한전KDN 사장까지도 매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문건으로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런 미심쩍은 절차를 거쳐서 파는 단계로 나아갔고 인수 과정도,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해 가는 파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이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방통위에서 이른바 불법 2인 의결에 의해서 매각이 승인되는 그런 과정까지가 진행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YTN을 사영화시켰던 행정조치를 바로잡는다면 또는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해서 그런 매각 과정이나 행정 승인조치를 취소시킨다면 우리 산자부는 한전KDN으로 YTN 지분이 다시 복원되는 것에 어떤 입장을 갖게 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정법에 입각한 사안 이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공영에 있던 공공기관의 언론사 지분이 이런 미심쩍은 상황, 부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영화됐다면 복원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정의에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볼게요.

만약에 한전KDN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YTN과 원래 기존에도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정상적인 상황을 복원하고 싶다’라고 판단한다면 지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그 부분도 어차피 지금 지분의 이동과 매각이 이루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성이 발생돼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당연히, 당연히 현실적인 여러 고려점들이 있겠지요.

방향에 대해서 여쭙어보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다가 기술적으로 방법이 안 찾아지면 못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 이미 팔렸으니까 끝이야’ 이것은 너무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 사회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행정은 명분 문제도 있지만 이행 가능성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 사안이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참고로 한전KDN에는 YTN 매각대금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노종면 위원 앞선 질의 내용 들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노종면 위원 마사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이게 송 장관님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마사회가 2022년 8월에 농림부로 혁신안이라는 것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분을 팔라는 압박을 받던 시점이었어요. 요청을, 요구를 받던 시점이었습니다.

‘최근 3년 당기순익 개선 흐름이 양호하며’ 등등등 ‘경영효율화가 진행 중이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재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자회사’, 안 팔렸다는 뜻입니다. 안 팔렸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한전KDN이 11월에 손을 들었고 마사회는 한 달 뒤 2022년 12월에 손을 듭니다.

비슷한 상황이, 아까 한전KDN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음 것 보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마사회에 YTN 지분 매각을 종용합니다. 마사회장이 그 자리에 불러 나가서도 안 팔겠다고 해요. 매각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에 파는 쪽으로 갑자기 급선회합니다. 이후 과정은 마찬가지로입니다.

송 장관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까다로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지분을 복원하겠다고 하면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노종면 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선진화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고요, 정부에 따라서 혁신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적으로 언론사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노종면 위원 그것을 빼앗아서, 특히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안 팔겠다는데 그것을 빼앗은 거지요. 빼앗아서 특정 기업에 넘겨주는 것, 돈만 있으면 다 해도 된다, 이게 공공기관 혁신이나 선진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당시에 명분을 혁신으로 포장한 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농림부나 산업부에서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기재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게 있다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정은경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노종면 위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는 사업, 산후도우미서비스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 사업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노종면 위원 이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으로 매칭이 되더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게 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이 돼서요.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21년까지는 국가가 하다가 22년부터 이양사업이 된 건 맞는데 22년부터 5년에 걸쳐서 일종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 비율이 7 대 3으로, 국비 7, 지방비 3으로. 그래서 내년까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전부 다 지방에서 책임져야 돼요.

제가 다음 질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의 개요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과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지급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대상을 넓히려는 요구만 하고 국비 지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안 해 줘서 저런 미지급 사태가 시도별로 확장되고 또 올해는 거의 대부분 시도가 다 미지급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해 주

시고요. 추가질의 때, 오늘이 됐든 다음이 됐든 여쭙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확인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너무나 애들 많이 쓰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년 결산심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망국적 국정 운영의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또 여러 정책의 퇴행과 예산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부적절한 감세를 남발해서 국고를 축내고 또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고 지방재정까지 파탄에 몰아넣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될 R&D 예산을 나눠먹기라며 대폭 삭감해서 과학기술 현장을 쏙대밭으로 만들었으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산업 정책을 남발해서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왕고래, 체코 원전 등 오로지 대통령 치적 쌓기에만 급급해서 수천억 또는 수조 원의 국익 손실을 방치했습니다. 하다못해 결국에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자행해서 환율 폭등, 주식시장 폭락 등 금융시장의 파국까지 불러오는 등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수 경제 침체 또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 재정 운영의 혁신을 잘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형사보상법 제정 취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아주 일찍이 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그 정신을 답아서 국가가 형사 사법 작용으로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했을 때 그것을 제한당한 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죄 확정 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24년 형사보상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런 증가가 검찰의 부실 수사 또 무리한 기소 영향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형사보상금이 급증하게 된 게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대 또는 군사독재 시절의 무리한 수사 또 인권 탄압적인 수사로 인한 사건들의 재심이 최근에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서왕진 위원 자세히 알고 계시는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23년에 상당히 급증해서 569억 원, 24년에는 지급 총액이 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용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전용을 58억 원 또 이용을 313억 원을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요. 검찰청 운영인건비라든지 운영기본비 또는 시설운영비와 같은 사실상 고정성 경비까지 끌어다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급이 급증한 원인이 과거사 사건의 재심이 무죄 확정되면서 고액 보상금이 늘어난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검찰과 사법권력의 오남용이 빚어낸 피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때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타 세부사업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라 이런 국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동일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산 과정의 지적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또 검찰청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재심 사건의 결과를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예산 증액과 관련해 갖고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현재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도 맞지만 이게 검찰 과정보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안기부, 경찰 단계에서의 불법 구금이 대개 재심의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원인 자체가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요. 검찰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 5년간 무죄 사건 3만 6117건 중에서 사평위가 평가한 바를 보면 검사 과오로 판단한 사례가 3730건, 약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징계 검사는 0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무죄평정도 엄격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죄평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증거 판단이 잘못됐다는가 또는 공소 유지가 잘못됐다는가 과오가 발견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인사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반드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든다면 김학의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25년 5월 8일에 서울고법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구금 보상 1억 2510만 원, 비용 보상 899만 5000원 지급 결정을 공지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서 집행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2013년 1차 수사 또 2014년 2차 수사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피의자 특정에 실패했고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것을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를 했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발목을 잡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무죄

확정으로 귀결됐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국민의 예산이 형사보상금으로 김학의에게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죄 구급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 취지는 존중해야 하지만 수사 실패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 또 내부 징계,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텐데 법무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제대로 그 부분 집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과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히 검찰과 관련된 사건에 관련해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그런 수사를 해 갖고 결국 수사가 최종적으로 실패해 갖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심려와 또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건에 관련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감찰하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는 가장 근본적 방안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0일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이후에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공소청범 또 중수청범이나 형소법 개별 입법은 공론화를 통해서 추후 추진하는 방침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할 때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인지 또는 행안부에 둘 것인지,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검찰 개혁안에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이 돼 있습니다. 또 현재 민주당 안에는 행안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직법상에 분명하게. 그런데 행안부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정부조직법의 현 구조를 봤을 때 막강한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또 중수청에 대한 지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경우에 지휘 통제 기능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마는 법무부의 탈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높지 않아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 대 원칙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또 동시에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원칙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또 독자적으로 인지하고 또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종결시켜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하든지 아니면 기소하든지 또 기소한 이후에는 공소유지를 하고 최종 집행까지 다 책임지게 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개시한다거나 독자적으로 인지한다고 하는 그 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 권한이 어딘가는 다시 재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검찰이 과거에 수행하던 중대한 범죄자들에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거기에 맡기고

또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는 전체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착수하거나 독자적으로 인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수사의 착수 또는 인지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하면서 분명하게 반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분리해 낸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의 권한을 어디 청에 두고 그 관할을 행안부로 할 건지 아니면 법무부로 할 건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큰 방향, 큰 원칙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약속을 하신 것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행, 실행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그것을 설치할지 또 수사 보완 등의 요구는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관여하게 될지 하는 부분들 아주 세세한 논의와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 또 민주당이 앞으로 제출할 법안 등 포함해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통해서 꼼꼼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피곤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닙니다.

○**서왕진 위원** 오늘 오전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적인 추가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유연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또 각 부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명문화된 공식 합의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철저한 점검 또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굉장히 거친 언급으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탄핵과 내란 수습 과정을 잘 설명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답을 해서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특유의 극단적 협상 전략인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마는 분명한 것은 여전히 미국 내 극우 인사들 중에서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부정선거 음모 등을 굉장히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 달에는 미국의 극우 인사 모스 탄이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온갖 유언비어를 남발했고 또 고든 창이나 애니 채과 같은 미국의 극우 인사들이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대거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한미 협력을 훼방 놓는 이런 극우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 정계에 한국의 내란 수습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또 한국 사회 민주주의 복원 노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이런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혹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정부는 이번 대통령의 방미를 포함한 관세협상 과정, 그 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정부의 각 관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우려와 관련된 오해들을 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사실은 아직까지 이게 전면화되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이게 더 심화되고 더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당, 큰 정당조차도 그런 논의들에 동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이 한미 극우 커넥션을 끊어 내기 위한 좀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꾸준한 노력과 설명으로 결국은 성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미 양 정상에 상호 인간적 이해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큰 전망을 공유했기 때문에 실제로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선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왕진 위원** 회담 내용 결과에 대해서도 좀 여쭙보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했던 지난 관세협정 결과와 특별한 변동 없이, 변함없이 잘 유지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현재까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왕진 위원** 정상회담 종료 직후에 루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더 원하고 있다. 또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서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갈 거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게 미국 내 농민 세력을 달래기 위한, 지지 세력을 달래기 위한 수사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마는 혹시 미국의 그동안의 협상 태도를 보면 추가적인 관세협상 조건을 내밀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전히 국내 농축산업을 지키는 노력은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 입장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희들이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국내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까지도 미국 측이 알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 기업 간 업무협약이 4건이 체결됐다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수원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의 엑스에너지 등과 맺은 SMR 관련 협약도 있고요. 또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등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맺은 협약 또 한수원과 우라늄 연료 공급 업체인 센트루스가 맺은 지분투자 협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4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엑스에너지는 과거에도 SMR 지분투자나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고 또 한수원과 센트루스도 23년부터 꾸준히 협약을 맺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협약을 맺은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하던 것을 뭔가 기업들이 진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한 건지 혹시 그런 구별이 있으십니

까?

○**국무총리 김민석** 해당 협약 각각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귀국 후에 보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대목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 방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기존에 쪽 해 오던 노력을 더 추가적으로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앞당기는 노력 등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한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서왕진 위원** 얼마 전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와 불공정 비밀협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도록 이번에 맺은 원자력 관련 어떤 협력 사항들 이것이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협정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내용을 좀 투명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 또 한편으로는 분단 국가라는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미 협력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미 협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 국가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협상하고 협력하는 그런 원칙들을 저희들이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국익 중심으로 그리고 늘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해 가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늦은 시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서 저는 제 질의시간의 절반만 사용하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이렇게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편하게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여쭙볼 예정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이 진짜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체 자산이 1200조 원이 넘고요. 대한민국 명목 GDP가 지금 2550조 원 정도 되니까 GDP의 절반 정도 되는 진짜 엄청난 규모입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6~7%를 보유한 국내 주식시장 최대 기관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큰손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GDP 절반 규모 국민연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가 연금제도 운용뿐만 아니라 1200조 원의 기금운용까지 책임지고 있는 구

조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인데요 그 위원장이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의문이 있는데요, 총리님. 보건복지 전반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처가 복지부인데,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고도의 투자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기금운용 책임까지 복지부가 담당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연금제도 운용이나 급여 지급 같은 사회보험 본연의 행정이야 당연히 복지부가 맡는 게 맞을 텐데 기금운용만큼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조직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총리님,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비슷한 고민 많이 해 봤습니다.

○이소영 위원 경제부총리께서도 계신데 과거 모 야당 의원님께서서는 기금운용본부를 기재부 소속으로 독립시키자 이런 법안도 발의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경제관료시니까 혹시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져 본 적이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때 기금운용이라는 게 잘해서 수익을 내야지만 나중에 기금의 건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부처, 꼭 기재부가 아니더라도 경제 관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소영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잠깐 거쳐 오면서 인사청문회 참여를 했었는데 혹시 이 질문 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때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었는데 혹시 그동안 생각해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금운용위원회도 한 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집행되는 것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복지부의 노력이나 이런 걸 폄하하려는 건 전혀 아닌데 저는 보건복지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이렇게 1200조 원 기금 운용까지 전담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정책 방향 결정, 자산배분안, 위탁운용 비중, 기금운용계획 모두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이 20인으로 구성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당연직 위원인 장관관님들 제외하면 사용자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 대표, 농어업인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모두 돈 내는 가입자의 대표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 같이 보시면 수협중앙회 부대표, 소비자연맹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간부, 한국노총 임원, 민주노총 임원. 정말 놀랍게도 1200조 원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결정하는 분들인데 투자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해외

투자 비중이 58%에 이르는데 해외투자 전문가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지급 14년째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 구성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문제의식에 공감 내지는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적인 어떤 최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 대한 대안을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던 경험으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 운용은 실제 일을 하는 펀드매니저들에 의해서 거의 되는 측면이 많다 하고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기금운용본부에 전문 운용역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최종 의사결정, 주요 의사결정을 저분들이 의결해서 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보장 어떻게 하실 건지 인사청문회 때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고민 중에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요청드리는데요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 결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운용 목표도 과도하게 보수적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최근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률 목표치를 1%p 올렸거든요. 원래 4.5%였는데 5.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5.5%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평균이 6.8%고 작년에는 15%였습니다.

○**이소영 위원** 맞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이 8%대고요. 공단 설립 이후 누적 연평균 수익률이 6.8%, 어떻게 기간을 잡아도 6% 후반대인데 5.5% 목표치를 운용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보수적이지요. 해외 연기금의 목표치와 비교해도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아무리 장기 수익률 전망을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용 목표는 실제 수익률인 6.8%보다는 높아야 목표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기금위원회 구성에서 이게 수익률을 끌어올릴 투자보다는 단순히 안정적인 관리에 방점을 찍고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료를 변경 전의 계산으로 연금 수익률을 1% 올리면 고갈 시점 5년 늦어지고 보험료를 2%p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런 분석보고서가 나온 적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 계산으로 하면 조금 달라질 텐데요.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금 1200조 원이니 수익률 1%p만 올라가도 12조 원, 나중에 3500조 원까지 기금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1%면 35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목표를 과감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잡고 이걸 운용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십조 원이 더 쌓이게 되는 거지요.

캐나다 연금이 높은 수익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23년에는 수익률 세계 1위를 하기도 했던 연금이고요. 그런데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는 97년에 연금본부에서 기금운용 조직을 별도로 떼어 내 가지고 연금투자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해서 이 독립된 연금투자위원회가 장기투자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

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까지…… 이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냥 뉴스만 검색해 보셔도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기금운용을 독립시켜서 전문기관을 만들고 정부 부처에서 영향을 좀 덜 받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쌓여 온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정부에서 꾸린 전문위원회에서도 독립적 투자 실행이 가능한 기금운용공사와 같은 형태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전북도민들께서 좀 우려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더라도 전북 유지를 전제로 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전주에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킨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때 국민연금이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는 그런 엽기적인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언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고 두 분이 나란히 구속돼서 국민연금 역사에 오점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기금 운용을 하는 기구가 정부 부처에서 독립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또다시 정권이 바뀔 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연기금이 정치권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질의를 위한 질의로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주제를 다루고 또 법안이나 이런 관련된 정책도 계속 고민하고 발의할 예정인데요. 이 문제를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부총리님도 같이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밤늦게까지 우리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또 정부위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야당 간사가 질의를 하니까 ‘야, 이제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제 좀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차수도 변경해 가면서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리님, 그럴 각오가 돼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

○위원장 한병도 대답이 없으신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각오는 늘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어제오늘 질의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부총리님, 이 세수결손의 원인을 많은 분들께서 부자감세다, 법인세 인하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23년과 24년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과연 법인세 인하 또는 부자감세 이게 주원인일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됐고 특히 우리는 타격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가 겹쳐서, 3고라고 하는—고물가, 고환율 그다음에 고금리—이게 겹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법인세를 감면한 요인에다가 경기 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2022년도에 100조 원 되던 법인세가 2년 만에 62조 원 정도로 거의 한 40%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물론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 정확할 수도 있고 가장 부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 더 우선일까. 저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것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관료이신 우리 부총리님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 얘기하듯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제가……

○박형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법인세를 감면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 둔화 두 가지가 겹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위원 자, 뭐 이렇게 따지자면 제가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초과세수가 전전 정부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이 초과세수는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그랬어요.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보유세도 오르고 집 산다고 다 영끌해 가지고 집을 사니까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세수가 발생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문제다.

물론 이게 그쪽이 더 문제고 이쪽이 덜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초과세수 또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했더라는 그 책임이 분명히 크지요, 양쪽 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자꾸 부자감세다, 그리고 이번에 1% 올리지 않습니까?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인세 인하 정책의 취지를 좀 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유럽의…… OECD 평균이 23.6%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평균이. 그런데 우리가 25%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25%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 낮

취요, 24%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25%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높은 법인세를 유지하면 본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결국은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더 순환시키고 또 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게 만들어서 결국 2~3년 뒤에는 세수가 더 확보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물론 예측과 달랐지요. 예측이 그 당시에 했던 대로 경기가 그대로 순탄하게 갔더라면 아마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사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가 못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지금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또 일부 의견은 확장재정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확장재정 정책을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국가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외국처럼 그렇게 확장재정 정책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생산성 저하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생산성 저하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구구조가 지금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산업구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겁니다.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졌어요. 올해 1.8%인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9%대입니다.

○박형수 위원 1.9%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형수 위원 하여튼 이 잠재성장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단편적이다. 확장재정 정책을 썼을 때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이게 지속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총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노조법과 상법 개정안 이게 과연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저는 이 차원에서 총리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크게 얘기하면 사용자를 확대한 것, 두 번째는 쟁의행위의 개념을 확대한 것,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성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단체교섭의 대상자가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현대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천몇백 개가 되고…… 대우조선이지요, 하청업체가 이천몇백 개가 되고 삼성전자 천몇백 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1차 벤더만 해도 340여 개, 2·3차까지 합치면 거의 몇천 개, 5000개가량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많은, 수많은 하청기업 중에서 어디가 단체교섭의 대상자고 대상자가 아니냐,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섭창구의 단일화도 어디어디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 정해져야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단일화할 한 곳을 정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가 교섭권한이 있는 단체인지 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총리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관세협상에서 그나마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게 마스가(MASG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마스가가, 우리나라에서 부터 이미 조선업은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살아남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미국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벌하는 조항과 연결되는 부분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하청기업이 교섭을 요구해 왔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가 고발해 가지고 이 조항으로 처벌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쟁의행위 개념을 이렇게 확대하면 파업을 도대체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 쟁의행위 개념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혀 놨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어디까지 포함될 거냐. 구조조정, 해외투자, 해외기업 이전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오늘도 어떤 분께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셨어요.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생산 감축, 인원 감축 아니겠습니까? 그것 당연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파업을 해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면 구조조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이전, 해외투자. 순수하게 고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해외투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해외투자를 하면 어쨌든 간에 거기 현지에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고용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열어 놓은 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로자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는 것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자성 확대 그다음에 쟁의행위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또는 감면 이게 어떤 시그널을 줍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파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이 시그널이? 저는 이것은 분명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물론 정치인으로서 총리가 되셨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총리가 된 김민석과 정치인 김민석은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은 공약도 있어야 되고 지지자 눈치도 봐야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위원이 된 정치인은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우리 경제도 보고 국가도 보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주신 많은 말씀이 이미 국회에서 찬반양론으로 필리버스터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논의가 많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걱정에도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용과 노동, 사용자와 노동자 양측에 있어서 자기가 저야 될 적절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그중에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다, 나도 그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있어서 사실상 그 파업에 대한 정당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사실상 노조의 파업 자체를 또는 노조 자체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 문제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법이 전체 노사 문화를 포함하고 산업 문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선순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제가 노조를 탄압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손해배상 이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는 정부위원이든 우리 국민 모두가 70년대, 80년대 식의 사고를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전태일 열사가 노동,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기업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것은 우리 국내 업체가 아니라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서 발전해 온 기업을 가진, 그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얘기하고.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노동부장관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노조법 개정안에 보면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청노조가 만약에 원청에 교섭을 요청하게 되면 1차로 노동위원회에서 그 요청한 의제가 합당한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산업 안전, 성과급, 노조가 요구하는 게 열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원청이 지배하는 의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도출하게 되고 그 의제 안에서 교섭할 사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박형수 위원 취지는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딱 와닿게 설명을 못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근로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근로조건이고 임금도 근로조건이고 작업환경도 근로조건이에요. 그런데 원청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근로시간이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단체교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예요, 임금은 하청업체의 사업주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이 말을 넣어 놓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라는 말을. 그렇다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소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가장 큰 염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임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하면 마치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마치 근로자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히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결국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단체교섭을 원청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예, 말씀하신 대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청 교섭과 함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총리님, 다음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상법 역시…… 총리님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다 얘기했다라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거꾸로 한번 질의해 볼까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상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총리님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상법 역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성실의무, 이사의 성실의무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느냐, 주의의무를. 그런데 그것을 주주까지로 확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주까지 확대하면 각

주주 간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고 회사와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사가? 결정을 못 하는 거지요. 결정을 못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주주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고소당해서 배임으로 처벌받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회사 이익을 위하하니 또 이쪽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결국은 투자를 안 해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는 망가지는 거지요.

그런데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뭘 도입했나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하는 것을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으로 확대를 했어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또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을 하다가 다시 정관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걸 확대하는 것은 아예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미국과 일본이 이걸 풀어놓은 이유가 뭘겠습니까? 그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왜 돌아왔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위원들께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다른 방식으로, 경영계가 마음대로 투자를 하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의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아까 간사님 질문 중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 가지고요.

○박형수 위원 총리님 다음에 부총리님 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주신 여러 가지 말씀과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이 주주들의 입장에서 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또 그런 다른 평가까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풀어 가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주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미국·일본은 왜 돌아왔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어느 정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예산이 의무지출에 다 가 버리고 재량지출이 마이너스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D를 줄여야 되지요. 그다음에 AI라든지 성장 부분에 투자를 못 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작년에 2/4분기에 -0.2% 성장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성장하는 예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악순환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 되면서 내가 국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필요한 분야는 진짜 좀 투자를 해 줘야지만 이게 선순환 돌아가지 단계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해서 안 하다 보면 경제가 진짜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는 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측면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필요한 데 하는 것은 그대로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당 간사님께서 10분을 줄인다고 하니까 아주 기쁜 반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질의는 오늘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세 분 계시므로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총리님, 한전KPS에서는 2023년, 2024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전KPS가 2025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4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는 산재 사망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KPS가 2025년 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서는 20년에서 24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단 한 명도 없는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사람이 죽었는데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때는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기재부에 보고할 때는 사망자가 제로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0명, 이게 보고서일까요? 이런 황당한 결과는 단순히 KPS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데는 기재부의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망자 수는 산재 승인 연도 기준으로 잡으니 해당 연도에는 0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병 사망자는 산재가 원인으로 나중에 공식적으로 밝혀지더라도 보고서에서는 모두 제외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가 하청일 경우에는 직원이 죽어도 원청 보고서에만 기록이 되고 정작 자기 회사 보고서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직원이 죽었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노동자의 죽음이 회사 간의 장부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숫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재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제도개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답변 좀……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산재가 발생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산재가

판정이 되는 시점에서 이게 카운트가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지금 그게 늦으니까 산재가 났다 했을 때 그거는 통계가 왜 안 들어가냐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허성무 위원 예, 그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저희들 평가에는 산재가 발생하는 시점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완전히 산재로 해 가지고 판정되는 경우 그때는 통계에 잡히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3년, 24년에도 사망자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는 보고가 됐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기획재정부에는 0명으로 보고가 되는 것, 그런 격차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시차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이것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은 통계로 잡히는 거는 그냥 딱 판정되는 시점이고 저희들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발생한 시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듀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평가가 나빠서 경영평가 전체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 때문에 좋은 경영평가를 받고 성과급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허성무 위원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안전평가제도가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배점을 4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한전KPS의 경우에도 안전관리항목 가중치가 6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KPS가 2020~2022년에는 B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23년에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무실적 개선으로 A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가가 왜곡되면 누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전은 뒷전이고 돈이 앞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의 생명은 무시되고 기관의 실적만 챙기는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 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특히 이 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총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평가기준을 바꿔 가지고요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제가 좀 나가서 하겠습니다.

저기서는 너무 멀어 가지고요.

경제부총리님, 국민들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제일 민감하게 바라보는 게 부동산, 주식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두 시장이 민생의 삶을 좌우하고 그리고 또 나라 경제의 어떤 혈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경제가 숨을 쉬려면, 사실 부동산에는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래야, 주식시장이 살아야 금리도 내리고 금리가 내려야 가게·자영업자·청년들이 버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에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고가주택의 뽕뽕한 한 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1주택자의 경우에—저 슬라이드를 봐 주시면요—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면 양도 차액의 80%가 공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18억에 샀어요. 샀는데 10년 지나서 58억이 됐어요. 그러면 40억이 양도 차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은 2억 3000만 원 수준이지요.

그런데 6억에 산 집이 10년 후에 20억이 됐다 그러면 차액이 14억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80% 공제를 해도 여기는 2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40억 차액, 한쪽은 14억 차액인데 세금 내는 거는 한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고가주택 한 채만 잘 갖고 있으면 10년 있으면 80%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그냥…… 그것을 뽕뽕한 한 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전 현상인데……

그런데 주택 말고 토지나 그냥 건물의 경우에는 15년을 가지고 있어야 30% 인정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게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부동산이,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이 더 올라가고 지금 뭐 웬만한 데가, 한 사십 몇 평인데 50억 하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저는 이것을 과세 당국에서 세율을 좀 손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는요, 그때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유한, 국민들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저런 부분도 과세 형평 차원에서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 보니까 지금 왜 대주주 종목당 50억

이상에서 10억으로, 주식양도세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발표를 하니까 주가가 금방 하락했어요. 포인트는 보시고요. 주가가 아주 그냥, 포인트가…… 그래 가지고 또 시장이 그러니까 ‘아, 이것 안 되겠다’ 해서 ‘다시 50억으로 하자’ 하다가 지난 8월 20일 날 다시 대통령실이 ‘10억으로 그냥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장의……

○조배숙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시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늦지 않는 시기 내에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배숙 위원 언제 결정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부동산, 주식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이것을 자금 흐름을 잘 원활하게 해서……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가서 우리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진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柳榮夏 위원 국방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 아시다시피 대구 K-2 공항은 우리 공군의 주력 부대인 제11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柳榮夏 위원 그리고 공군군수사령부도 있고 공중전투사령부도 주둔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7공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따라서 이번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는 미공군 시설물도 이전되는 것이 포함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구 K-2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국정과제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막대한 재정 투입이 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4월에 장관께서 아시다시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조 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규정이 된 거지요.

○柳榮夏 위원 그래서 2014년 5월에 대구시가 국방부의 K-2 이전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 K-2 공항이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한다고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3년 11월 29일 날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고요. 이어서 국방부가 2023년 12월 8일 날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TK 신공항 이전사업 중에 군공항 부분 이전사업비가 11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민간 사업자들이 PF를 일으켜서 이 사업비를 조달하면요, PF 금융비용 7.8%를 포함해서 금융비용만 무려 14조 8000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PF를 일으켜서 기존 사업부지를,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LH나 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도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민간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나 또는 지금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는 미분양 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서 결국 들어오지 않아서 작년 7월에 SPC를 통한 개발은 좌절됐던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보면 2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는 종전부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임의 규정입니다. 실제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담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원칙입니다만, 그런데 말입니다, 법에 정한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성이 없어서 정말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하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柳榮夏 위원 그리고 이게 예정대로 2030년에 개항되는 것도 장관께서 개항이 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장관께서 보실 때 이전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대구 K-2 군공항 이전은 당초 2008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柳榮夏 위원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어서 수원이 뒤따라 했고요, 수원 공항이. 그다음에 광주공항이 잇따라서 했는데 그때 3개 지역, 세 군데 지역구 의원들이 아주 협심을 해 가지고 기부 대 양여 특별법을 제정을 했던 겁니다, 13년도에. 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 케이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이 공항 이전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당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안을 찾을 때, 지금 특별법에서는 임의 조항으로 적자 보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임의 조항이 아닌 강제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LH 같은 공공 주도 개발로 하는 대안을 저는 좀 찾아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항에는 미 7공군 부대의 시설물 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공항 이전이 좌절됐을 경우는 단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마찰의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찾아 주시는 데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재부하고 대구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이견이 노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부 대 양여 방법이,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여타 기부 대 양여 방법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또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영하, 조지연, 김종양, 조은희, 조배숙, 조계원, 임미애, 윤후덕, 김성희, 안도걸, 이수진, 정진욱, 허성무, 서왕진, 박형수, 이소영,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7분 산회)

○출석 위원(45인)

고민정 광상언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성희 김승원 김용만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종양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유영하 윤후덕 이강일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임미애
임종득 전종덕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청가 위원(1인)

김상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경청통합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제성장수석비서관 하준경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박관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감사원

원장 최재해

사무총장직무대행 신치환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이후삼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교육부
장관직무대행 최은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제2차관 류제명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차관 이진수
국방부
장관 안규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차관 김민재
국가보훈부
차관 강운진
보훈문화정책실장 오진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제1차관 이스란
환경부
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이상경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차장 김창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세청

청장 임광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조달청

청장 백승보

통계청

청장 안형준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병무청

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도준수
소방청
청장 허석곤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차장 서효원
산림청
청장 김인호
차장 이미라
특허청
청장 김완기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상청
청장 이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차장직무대리 여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차장 배형원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차장 김용호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8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